2018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2016
2017
201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Ⅰ 연구소 소개

006 설립목적
006 주요기능
007 경영목표
008 연혁
010 조직도
011 일반현황

Ⅱ 2018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 교사를 중심으로
016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020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02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024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026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028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030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적정수준 연구
032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034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연구 –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8 본조사 수행사업 보고서

일반연구

03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038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건강수준 측정 및 국제비교
04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04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044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046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048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050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052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054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
05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Ⅲ
05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Ⅱ)

수시연구

060 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방안
062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유치원 한국어 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064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066 사회권으로서의 육아권 정립과 실현 방안 연구
06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070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072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등록제 추진 방안 연구
074 어린이집 오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개발적립금연구

076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Ⅰ)
078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Ⅲ 2018년도 주요 활동

주요 행사

082 육아정책 심포지엄
084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
085 KAL 열린토론회 및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086 국제세미나
088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089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및 토론회
090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094 긴급간담회 및 브라운백 미팅
095 업무협약

주요 간행물

096 Issue Paper
097 육아정책연구
099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02 육아정책포럼
103 육아정책 Brief
104 KICCE Policy Brief
105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Ⅳ 2019년도 추진계획

201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108 201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109 중점연구사업

2019년도 사업개요

110 기관고유사업
113 일반사업

발간사

“

2018년에는 초저출산사회의 포용적 복지국가에 필요한
육아정책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보육실태조사,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누리과정 개정 연구를 비롯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구, 영유아 보건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행복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내·외부적으로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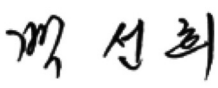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었던
2005년에 설립되어
보육과 유아교육,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구, 평가, 정책 개발을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 육아문화 개선 등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과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를 맞이하여
아이의 권리존중,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을 위해
가정-지역사회-기업-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

· 설립 목적
· 주요 기능
· 비전
· 연혁
· 조직도
·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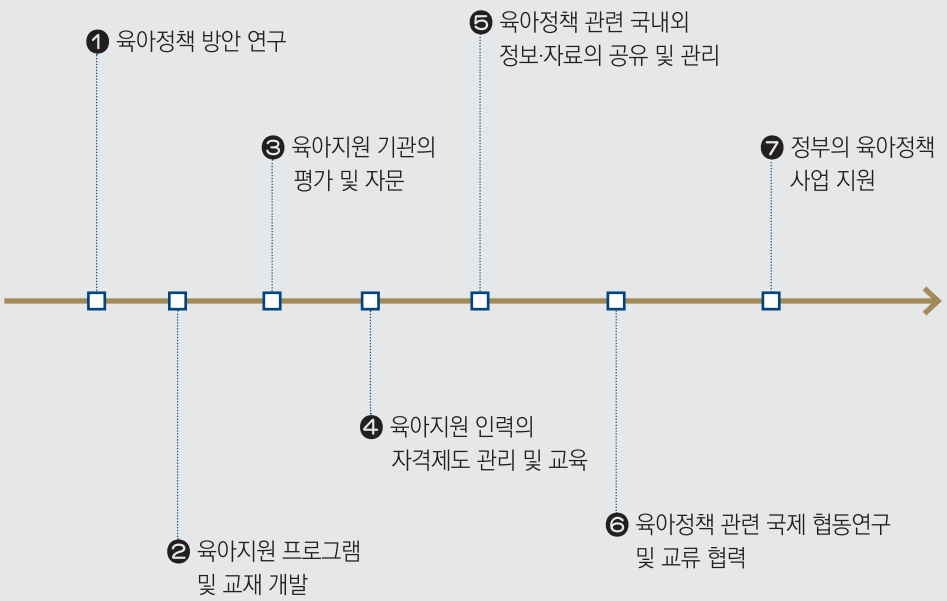
PURPOSE OF ESTABLISHMENT

설립 목적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MAIN FUNCTION

주요기능



MANAGEMENT GOALS

경영목표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사회를 실현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핵심가치]

- 행복
- 소통
- 혁신
- 공정
- 공유

[설립목적]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

[중장기 발전목표]

- 미래시민을 함께 키우는 선도적 육아정책 연구기관
- 한국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글로벌 플랫폼
- 소통·융합·상생 기반의 육아정책연구 생태계의 중심축
-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국책 연구기관

[경영목표] 추진전략

• 육아정책 연구 영역확대 및 정책 개발 선도

- 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 인구 및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영역 확장
- 육아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 기능 구축
- 국제 육아정책 연구 정보 생산과 개발도상국 지원
- 한국 대표 국책연구 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 산·학·연 및 다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
- 국내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 정책수요자의 연구 참여 및 성과 공유 확대

• 열린 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 혁신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 신뢰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성화

HISTORY

연혁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4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5

2005. 08. 17.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운영 방침 결정 (국무총리주재 제118차 회의)

2005. 09. 30.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공동부설센터)

2005. 11. 09. 초대 이옥 소장 선임

2005. 12. 26. 개소식

2005. 12. 28. 보건복지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업무 위탁

2006

2006. 12. 28.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국 업무 위탁

2008

2008. 01. 01.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 시작

2008. 09. 05.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관련 규정 개정으로 협력기관을 2개로 조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부설센터)

2008. 10. 31. 조복희 소장 선임

2009

2009. 12. 30. 보건복지부 2개 사무국 업무 위탁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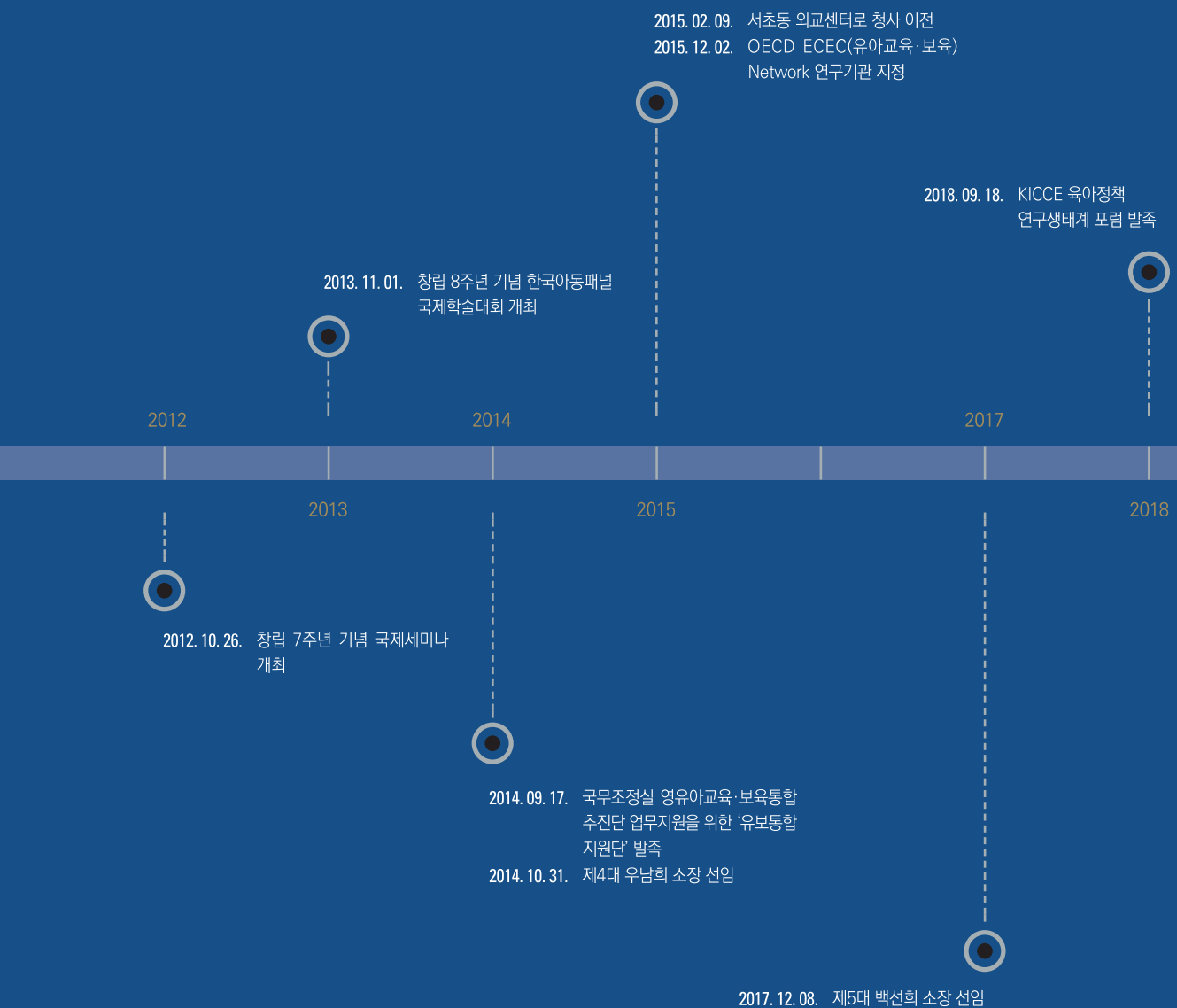
2009. 12. 30.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2010

2010. 01. 2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선진화사업지원단 업무위탁

2011

2011. 10. 31. 제3대 이영 소장 선임


2015. 02. 09. 서초동 외교센터로 청사 이전
2015. 12. 02. OECD ECEC(유아교육·보육) Network 연구기관 지정
2018. 09. 18.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발족
2013. 11. 01. 창립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2
2014
2017
2013
2015
2018
2012. 10. 26. 창립 7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2014. 09. 17.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업무지원을 위한 '유보통합 지원단' 발족
2014. 10. 31. 제4대 우남희 소장 선임
2017. 12. 08. 제5대 백선희 소장 선임

ORGANIZATION

조직도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단, 10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김교성(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김영우(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
김태헌(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변혜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성영준(SBS 시사교양본부 사회공헌담당 PD)
오성식(롯데 대홍기획 상무)
오현석(이산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이수연(한국워킹맘연구소 대표)
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미라(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조경배(민주노총 자문위원, 순천향대법학과교수)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교수)
*가나다 순

연구자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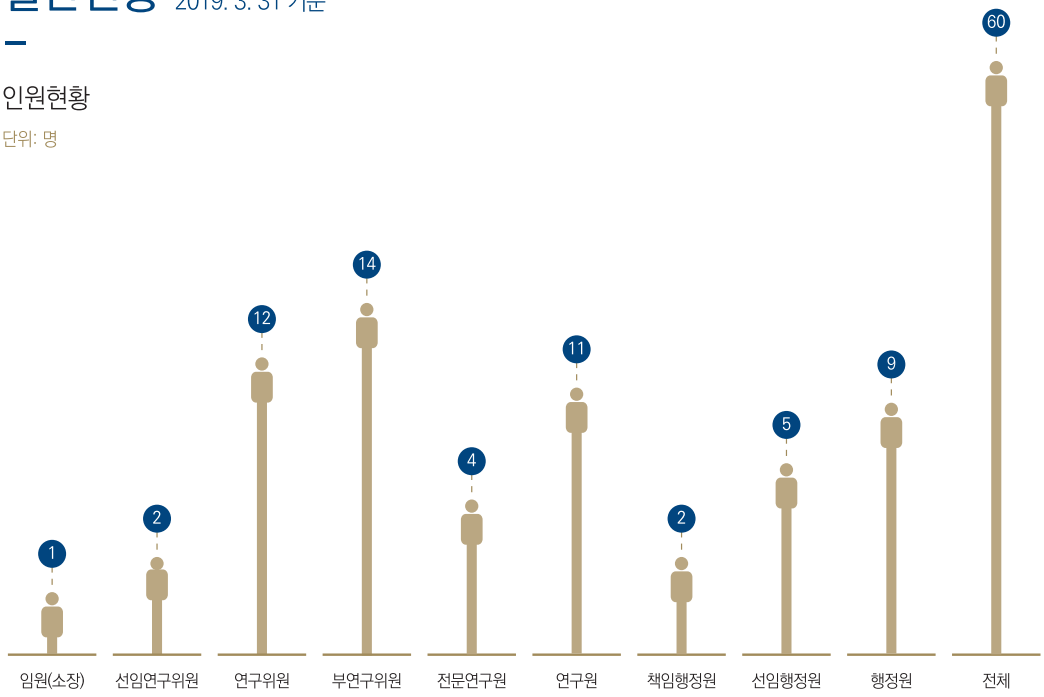
강선미(하랑성젠더연구소장)
김우창(카이스트대학교 교수)
문미옥(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성미애(방송대 생활과학과 가족학과 교수)
손인숙(건국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은기수(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삼식(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이완정(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주(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성애(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GENERAL

일반현황 2019. 3.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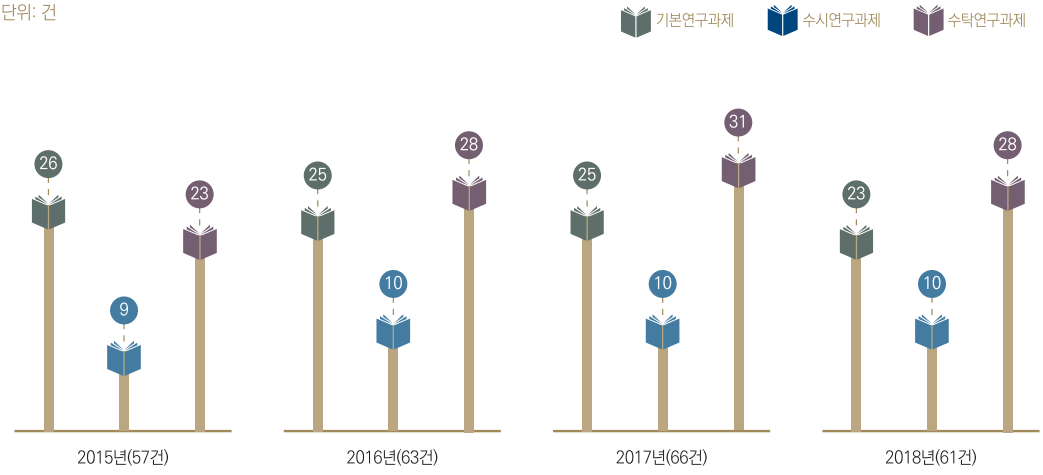
인원현황

단위: 명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단위: 건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연구

· 기본연구
· 일반연구
· 수시연구
· 연구개발적립금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 교사를 중심으로

김은영, 박창현, 김혜진, 김수정

배경 및 목적

· 2017년 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관련한 격차 완화 정책은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명시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격차는 이원화된 현 체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국민참여 워크숍: 유아교사 격차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원), 서비스 수혜자(부모), 제3자(일반 국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5차례 실시

·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912명의 응답 분석

· 델파이조사: 교사양성기관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3차례(1차: 13인, 2차: 108인, 3차: 96인) 실시

· 정책토론회: 국가교육회의와 공동 개최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현황

· 교사 격차는 다양한 특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 뿐 아니라, 설립유형 간 차이, 소재지 간 차이, 기관 규모 간 차이가 있음.

·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법적인 권리보장 수준은 낮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에 대한 인식

· 원장은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교사는 처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부모가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으로 두는 기준은 기관 유형이며,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선택함.

유치원과 어본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인식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에 앞서 교사의 학력, 자격, 역할이나 직무, 전문성 등의 격차를 완화해야 함.

·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현 상태 유지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필요함.

정책 제언

· 교사 자격 및 양성, 교사 임용 및 배치, 신분 및 신분 보장, 교사 직무 및 역할, 교사 처우 및 복지, 교사 연수 및 전문성 제고 6개 영역에 있어 2019-2023 연도별 로드맵 제시

정책 제언

· 제도적인 측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 체계 및 양성 제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공통 임용 제도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기준 일원화, 유아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아교사 일과운영 시간과 편성에 대한 공통 지침 마련, 유아교사 호봉 단일화 및 국가 지원의 근거 마련, 유아교사 현직교육 기준 일원화 및 국가 관리 근거 제도 마련

· 재정적인 측면: 누리과정 지원비를 교사 인건비 재원으로 전환, 보조 인력 등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재원 마련

· 행정적인 측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사 담당 부처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 일원화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유해미, 이윤진B, 박은영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아동 돌봄 분야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 초등 방과후 돌봄은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초등자녀를 포괄하여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함.

· 아동 돌봄의 공백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부모들의 육아지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지역 돌봄 인프라 조성 관련 정부 계획 및 지침, 유관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 및 서비스 제공과 연계 등 검토

· 설문조사: 아동 돌봄 분야 민관협력 내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역의 담당 공무원 총 107명과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의 실무자 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

· 사례조사: 지역특성별 민관협력의 특성 및 운영원리, 역할 분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광역시 총 4개 지역, 중소도시 3개 지역, 군 단위 1개 지역의 지역돌봄공동체 운영 사례를 분석

연구결과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 지원 및 운영 사례

· 대도시 모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센터의 중간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지역에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공급이 미흡한 지역에서 유용하며(모형 1), 신규 공공 복합시설 내 돌봄센터를 우선 설치, 공간 활용 및 이외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원활하므로, 지역 내 연계 서비스 기관이 부족한 경우 적용할만하고(모형 2), 공동육아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주도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방식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부족에도 참여성에 기반을 둔 사업 확장이 가능하므로 모색할만함(모형 3).

· 중소도시 모형: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센터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돌봄나눔터 운영위원회에는 시청 담당자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민, 주민센터.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거나(모형 1), 지역 내 아파트에서 공간과 공과금을 지원하고 운영위원회에는 부모, 아파트 관계자, 초등학교장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됨(모형 2)

·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

한 지역에서 추구할만함.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민관협력 실태 및 요구

· 지역 내 아동 돌봄서비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민관 협력기구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다양한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지역중심 돌봄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중앙정부는 재정지원(리모델링비, 돌봄교사 인건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함.

·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며, 해당 사업의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함.

정책 제언

· 민관 협력기구의 구성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초등학교를 반드시 포함하고, 돌봄서비스 및 유관 서비스 기관 이외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해당 기구의 운영주체를 명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아동 돌봄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각종 컨설팅 및 지원을 담당하는 추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함.

· 민관 협력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구를 관할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배치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담당자 중에서 전담자를 배정하고, 민관 협력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며, 각 소속 위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 사항을 명료화함.

· 민관의 역할 분화: 중앙정부는 지역중심 돌봄사업에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마련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 내 돌봄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을 배치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함.

·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발굴 및 연계, 홍보, 민간 서비스 기관은 돌봄사업의 수행, 돌봄 인프라 제공, 돌봄 관련 정보 공유 및 교류, 서비스 연계 및 협력기구 참여 및 운영을 각각 담당함.

· 지역유형별 민관 협력체계 및 운영 모형을 제시함.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김근진, 문무경,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재정조달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불안정성 발생함.

· 2016년 12월에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으나 동법은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 영유아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유보격차 해소 등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재정 통계자료 분석

· 재정담당 공무원 서면 의견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학계 교육·보육 및 재정 관련 전문가)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구조 분석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구조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지방교육재정구조 및 복지재정구조의 체계 내에서 분석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구조를 각각의 법제도 및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분석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소요재정 추계

· 유아교육 및 보육 소요재정을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 국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설 소요재정을 중심으로 추계

· 재정추계 결과 관련 정책 중에서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개선방안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
-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정책 결정의 경로의존성 문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바우처와 유보통합 정책의 관계, 보육료 상한제와 원비 상한제, 무상유아교육과 무상보육, 제도설계의 정합성 문제 등을 논의
- 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개선방안은 보육지원 사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방안, 보육료 지원체계에서 수익자 부담 확대 방안을 제시
- 유아교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개선방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여부에 따른 재정조달 방안을 제시
- 정부 간 재정관계 거버넌스 개선방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조달 방안을 제시

정책 제언

- 정책제언은 각각의 시기마다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기방안, 중기방안, 장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
- 단기방안은 아동수당의 확대 및 보육료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2019년 말로 종료 예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여부에 따른 누리과정 재정조달방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논의를 통해 제기된 수익자 부담확대를 제시
- 중기방안은 지방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준칙 제정, 유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 제시
- 장기 방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 강화,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및 재정책임 재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 부여에 대해 제시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

강은진, 이윤진B, 이민경, 권용진, 이상구

배경 및 목적

·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의 양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 및 건강관리에 대한 공통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환아동 등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양육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시스템임.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해외(일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사례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함.

· 영유아 어머니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양육의 애로점과 해결방안 및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에 대해 조사함.

연구결과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요인과 지원 대상을 알아본 결과, 임신 중에는 '출산 및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32.1%)', 첫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34.5%)', 자녀 양육 시에는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감(33.6%)'로 나타남. 스트레스 지원 대상은 주로 '배우자'와 '친인척'이나 '도움 받은 이 없다'는 응답률도 높음.

· 영유아 부모의 산전검진시작 시기는 7.1주이며, 평균 산전검사 횟수는 8.7회로 조사됨. 58.3%가 산후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중 출산 전에는 철분제 이용(85.0%)이 가장 높았고, 산후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30.4%)의 이용이 가장 높았음.

가정과 기관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현황

· 자녀가 기관에서 갑자기 아팠던 경험은 64.5%이며, 이 때 기관의 조치 중 84.2%는 '가정 내 돌봄을 위해 귀가 조치'함.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별도의 보건공간이 있는 비율은 15.7%, 보건인력이 있는 비율을 10.1%에 불과해, 부모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 내 돌봄을 위해 귀가 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55.1%)으로 나타남.



영유아 부모의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에 대한 요구

· 자녀 양육 시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편한 점은 '홍보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61.8%)'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의 희망 형태로는 '지역에 양육 상담과 보건의료 상담을 같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모자보건지소(가칭) 설립(24.2%)'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국내외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사례

· 국내에는 원활한 양육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모자보건지소 설치 등이 진행되며, 교육·보육기관 내 간호사 파견 등 지원이 이루어짐.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춘 나라로, 모자보건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연속성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경쟁체제 아래에서 의료의 질을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프랑스와 영국은 국가주도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모자보건사업 역시 기존의 보건의료 시스템 내 공공 의료적 측면에서 관리함.

정책 제언

· "아이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생과 성장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케어의 연속성, 보편지원과 개별적 욕구 고려,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 임산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 체계 및 신생아 정보 등록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산모·신생아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육아지원을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의 확대를 제안함. 가정 방문 간호사의 배치와 역할(산전·산후관리)을 제시함.

· 보건 거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시, 유치원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사의 역할 및 배치 제안,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담당 보건교사 채용 후 거점 유치원에 배치, 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 채용하여 거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육아건강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육아중심형, 보건중심형, 의료중심형 육아건강통합지원센터를 제안함. 특히, 신규설치 및 기존 관련 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적용가능하며, 이를 위한 육아건강지원센터의 기능, 인력구성, 설립근거를 위한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

김아름, 유해미,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육아도우미(Private Babysitters)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법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육아도우미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급여, 자격,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 연구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질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육아도우미의 개념, 유형, 직무내용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등을 검토함.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경험이 있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용 동기 등을 살펴보기 위해 10인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 근로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6인의 국내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 그 밖에 온·오프라인 육아도우미 인력 소개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연구결과

· 해외의 경우 민간 영역의 육아도우미라 하더라도 인증제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신원조회 절차는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부모와 육아도우미 간에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도록 하여 노동관계법 적용 및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 정부의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가장 높게 원하고 있었으며, 육아도우미의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서비스를 보장하고, 부모와 신뢰형성 가능한 구인장치의 마련, 육아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지원, 육

아도우미의 신원보증 방안 마련,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정책 제언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 DB를 정부차원에서 구축하여, 민간 육아도우미의 정확한 신원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민간 육아도우미 인증 및 소개의 단계까지 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관리에 관하여,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자격증을 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시스템 구축은 필요함.
- 또한, 현재 민간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교육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문 강사진의 파견과 강의 장소 지원 등을 통해 육아도우미의 질적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주와 육아도우미 간의 고용관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육아도우미가 적절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및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

박창현, 김나영, 이유진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화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과 함께 초 저출산 기저의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연구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련 이슈 및 과제를 발굴하고, 저출산 정책 해결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미래 육아정책을 선도하고 사회적 인식에 기여하는데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소셜 빅데이터 관련 연구동향, 출산 및 양육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 소셜 빅데이터 분석(온라인상에 업로드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육, 유아교육, 보육, 육아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후 추이분석, 키워드 분석, 관계망 분석 등을 실시)

· 빅데이터 분석(예측 모형 도출, 머신 러닝을 통한 주요 요인 정량화)

· 전문가 조사(예측 모형 개발에 필요한 변인 파악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연구결과

주거문제, 교육환경, 고용문제, 노동환경, 젠더문화 관련 화제어 및 워드 클라우드 관계망 분석

· 주거 문제는 2016년 이후, 저출산, 정부, 정책, 결혼, 출산, 일자리, 생활, 서민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관련 빅데이터 예측 모형

· 랜덤 포레스트 모형 적용 결과, 5개 주제 키워드 중, 젠더문화, 주거문제, 노동환경의 세 가지 키워드 및 교육환경×주거문제, 교육환경×노동환경의 복합 변인이 출산 환경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나타남.

· 예측모형에 조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을 반응변수로 설정하고 연간 고용률, 가구당 소득을 설명변수에

추가하는 경우, 주거×교육과 연간 고용률만이 모형상의 유의성을 보임.

· 주거×교육과 연간 고용률을 기반으로 포아송 자동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조출산율은 다소 반등한 후, 2019~2020년에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됨.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 주거-교육환경 개선 및 스마트 시티, 삶의 질 제고 중심의 육아정책, 스마트 기반 육아공동체 구축 가능성을 도출함.

정책 제언

정책 방향

· 주거-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소득 및 계층격차 해소, 주거/교육/일자리/노동/젠더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및 기술 네트워크 확보,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과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정책 과제

· 사회적 위기요인 해결: 교육격차를 줄이는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확대, 이음새 없는 통합 유아교육-보육-학교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스마트워크/텔레 워킹/거주지 인근 공용 오피스 근무, 출산 및 육아 유급 휴가 적극 지원, 탄력적 근무제, 갑질과 차별 없는 직장문화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 미래사회 변화 대응: 놀이와 실험의 자유가 살아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 기술 및 산업혁신: 스마트 육아 네트워크 구축 필요, 초 연결 지능형 육아정보 네트워크 연계 및 통합, 공동육아 중심 스마트 시티 연결망 구축(놀이, 공간, 장난감 공유), 텔레 워킹, 스마트 워킹 시스템 구축, 스마트 공동육아 네트워크 관련 R&D 지원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김나영, 김근진,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임.

·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재정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본 연구는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료 취합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둠.

연구방법

·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제도 및 구조 관련 연구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자료 수집·분석

· 중앙,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예산·회계 담당자,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자, 재정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실시

연구결과

유아교육 세출 추이(2016~18)

· 총 세출예산규모 면에서 2016~18년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3.4조원(2016), 5.7조원(2017), 5.9조원(2018)으로 집계되었고, 증가지수(2016=100)를 보면 2017년 166.8, 2018년 170.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복지지원(누리과정지원, 급식지원)의 예산비중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누리과정의 경우, 공립유치원 18백억 원, 사립유치원 16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급식지원의 경우, 공립유치원 4백억 원, 사립유치원 8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영유아 보육 세출 추이(2015~18)

· 2015년 9.7조원, 2016년 10.1조원, 2017년 10.8조원, 2018년 10.7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증가지수(2015=100)를 보면, 2016년 103.1, 2017년 111.0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9.8인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증가세가 두드러진 정책사업은 시간제보육지원과 어린이집환경개선 등으로 나타남.

· 재원별 정책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지원의 경우, 시도사업비 비중이 높아 2015년 1.9조원, 2016년 2.0조원, 2017년 2.1조원, 2018년 2.1조원의 예산이 편성됨.

정책 제언

국가재정 관심 영역 설정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재정지원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자료의 취합 및 전달체계 구축

·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관련 정책사업이 수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정책들을 분류 가능한 수준에서 범주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재정자료를 취합해야 함.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자료 분석의 근거 마련

· 영유아 보육의 경우, 재정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제정을 위한 검토와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가정과 직장생활이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계챙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방법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현황 파악

· 일·가정 양립 정책 사각지대 분석

·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해외자료수집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정책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 실시

연구결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정책 설계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중첩되어 있음.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규모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4.1%였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0%,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30.0%였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만15~49세) 중 64.5%인 1,709,510명이 비정규직이고 939,161명이 정규직이었음.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정책

· 현재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정책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두루누리 보험, 영세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등이 있음.

일·가정 양립 정책 국외 사례

· 스웨덴은 육아휴직, 출산 휴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독일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의 대상이 됨.

· 캐나다 퀘백주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와 부모휴직 대상이 됨.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취업자의 근로환경

·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파견/용역/특수고용직일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로제 미도입 비율이 높았음.

· 일-양육병행의 어려움은 파견/용역/특수고용직이 가장 높았음.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일반 직장에서 자녀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에 진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늘려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등의 적용 대상을 취업자로 확대해야함.

·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해야함.

· 모성휴가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함.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장려금이 확대되어야 함.

·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성평등한 육아 문화 장착도 요구됨.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적정수준 연구

–

양미선, 김동훈, 최윤경B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적정 공급 규모를 추정함.

연구방법

·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관련 법 및 제도, 수급(수용)계획, 관련 선행연구 등 수집·정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장래인구통계, 어린이집·유치원 정원과 현원, 보육 수요율 등의 자료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수요와 적정 공급 규모 추정

· 중앙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계획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증설) 사례 수집·정리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연구방향 설정, 조사표 검토 및 설문조사 보완, 정책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연구결과

·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고려할 때 적정 어린이집 수는,

  -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4,902개소로 2017년 40,238개소와 비교하여 5,336개소 과잉 공급 상태임. 2019년 34,160개소, 2020년 33,500개소, 2021년 33,157개소, 2022년 32,765개소가 적정 수준임.

  -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4,495개소가 적정 규모이나,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가 공급되고 있어 5,843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 2022년에는 3만개소 정도가 적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달성 목표 40% 추가 확충 시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1,192개소, 2019년 972개소, 2020년 941개소, 2021년 969개소, 2022년 935개소, 저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도부터 연차별로 1,129개소, 891개소, 819개소, 800개소, 717개소임.

· 적정 유치원 학급 수는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0,170학급으로 2017년 36,470학급과 비교하여

6,500학급이 과잉 공급 상태임.

- 저위가정 기준으로는 2018년 30,674학급, 2019년 29,921학급, 2020년 28,971학급, 2021년 28,056학급, 2022년 26,770학급 정도가 적정함.

· 공립유치원 이용률 목표 40% 달성 위해

-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에는 353학급, 2019년 46학급, 2021년 69학급, 2022년 294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저위가정으로는 현재 과잉 공급 수준임.

정책 제언

· 민간 부문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정책 병행하여 추진

· 민간과의 협력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정책 추진

· 지역특성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 설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시군구의 보육수급계획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 관리·감독

· 보육실태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 정례화 및 유치원 취학수용조사 지침의 정교화

·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구조 마련

· 매입형유치원, 공영형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기준 구체화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

이미화, 이윤진B, 박상신

배경 및 목적

· 아동권리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이념을 한국 지역사회에 균형있게 안착시키고자, 본 연구는 한국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 및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연구방법

· 아동친화도시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국내 사례 분석(인증사례 4개 도시, 아동친화예산 6개 도시), 국외 사례 분석(오스트리아, 독일 4개 도시)
· 아동친화도시 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아동 및 부모 대상 설문조사(1,200명)
· 담당공무원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조사(11개 도시, 도시별 1~3인)

연구결과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및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

·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 7점 만점으로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 평가가 부모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교육환경 영역(5.2>4.1), 놀이 및 여가 영역(4.8>3.8), 건강·보건·돌봄서비스 영역(5.7>4.3), 안전과 보호 영역(5.7>4.1), 참여권과 아동권리 보장 영역(4.6>3.6)
·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 인식 및 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부모(48.8%)가 아동(40.7%)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아동이 부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참여권 5.4>4.8, 발달권 및 생존권 6.0>5.5, 보호권 6.1>5.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동 및 학부모가 동일하게 7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18.6%가, 부모는 20.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나(4.2>4.1)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도입 단계임을 알 수 있음.

아동친화도시 담당공무원의 인식 및 요구 결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자체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효과 등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특히 유니세프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인증과정에서 공무원조직과 NGO 단체 간의 의사소통 구조의 어려움이 일부 있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 한국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자체별 요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인증 받기 위해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사회 특성별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아동친화적인 가치관 형성 및 확산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도시규모 및 인프라 여건별로 기존 사업을 검토한 후 주력 사업을 시행해야 함.

정책 제언

· 법제도적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함.

  - 중앙정부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동복지법 상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및 '아동인권 교육'에 관련된 조항 개정안을 제시함.

· 아동친화도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항시 책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정할 것을 제안함.

·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컨설팅 기구가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통요소와 지역특성별 요소를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강점인 부분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함.

· 한국 아동친화도시의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아동 고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현 상황에서 한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되, 국외 선진 사례를 함께 흡수하는 방향성이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함.

  - NGO와 중앙정부 협업으로 기구 설립 후 인증사업 추진
  - 공공성있는 기구 주도 인증사업 추진
  - 중앙정부 주도 인증사업 추진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연구–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8 본조사 수행사업 보고서

김은설, 박진아, 이솔미

배경 및 목적

· OECD에서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제공,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영유아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3~5세 연령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 「TALIS 국제 유아교원 연구 1주기 사업(OECD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5-2019년)」 참여 과정 중 2018년도 본 보고서에서는 '본 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내용을 기록함.

·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영유아 교원 실태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고 교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연구방법

· OECD TALIS 3S 컨소시엄과 교원 본조사 전과정을 협업함.

·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1,106명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조사 관찰 및 관련 부처와의 회의를 진행함.

·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조사 진행 및 품질 조율을 실시함.

연구결과

2018 3S 본조사 추진의 성과

· 국가별 조정(National Adaptation)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상황과 현실에 적절한 내용으로 문항을 조절함.

· 각 문항에 대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

· 설문지 레이아웃(Layout Verification)을 확인하여 의견을 OECD에 전달함.

· 2018년 6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OECD 필수응답요구율인 75%를 완료함.

2018년 OECD TALIS 3S 사업의 성과

· OECD ECEC Extended Network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함.

· 조사 품질 관리(Quality Observation) 실시함.

· 2018년 OECD 국가분담금 제출을 완료함.

정책 제언

· 2019년 10월 본조사 데이터의 클리닝과 기술분석이 완료된 후 OECD가 공식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 2020년 OECD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교원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국가별 권고 등이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1주기 본조사를 마치고 이후 2주기 혹은 심층분석 진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상황상 어려움에도 조사진행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국제적 협업에 효과적일 것으로 봄.
- 온라인 화상 회의를 위한 보다 편리한 물리적 환경이 구비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김지현, 권미경, 최윤경B

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르는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미혼모·부 가정이 겪는 경제적, 사회 인식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양육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점들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음.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미혼모·부 현황 자료 및 통계자료 수집, 미혼모·부 지원현황과 지역별 미혼모 거점기관 및 미혼모 이용시설 수 등을 파악하여 전국적 지원현황 파악, 미혼모·부 지원 및 보호의 법적 근거를 수집함.

· 미혼모 양육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300명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육시기별 육아에서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음.

· 미혼모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미혼모·부 2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연구결과

국내 미혼모·부 지원정책 파악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미혼모·부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하고 양육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을 지원함.

· 한부모가족법 제1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복지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법 제2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미혼모 양육 및 자립실태 현황

· 조사에 참여한 미혼모의 연령은 30대가 43.3%로, 20대 41.7%로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가 15.7%포함) 나타남. 응답자 중 전업주부가 31.3%, 취업중이 24.7%, 구직중이 23.3%, 학업중이 20.7%임.

·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4.7점), 육체적 부담(4.2점), 정서적 부담(4.1점) 순으로 나

타났고, 여가 생활에서 여행, 영화나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관람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 아버지의 자녀 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의 46.7%가 인지가 되어 있으나, 양육비 수급여부는 11.3%만이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함.

· 또한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시기는 평균 만 3.8세로 아버지 부재로 인한 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경우 유아시기에 가장 높고, 자녀의 경우 초등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임신·출산기에는 위기 임신에 대한 상담 및 미혼모 지원정보에 대한 정확한 제공 등을 위한 상담창구 지원이 필요함.

· 시설 거주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재가양육 미혼모가족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급함.

· 이에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상황적으로 더욱 취약한 돌봄 가정을 정하여 돌봄 우선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 대상 돌봄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순위 선정마련이 시급함.

·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미혼모·부 초기 거점기관의 개소수와 예산을 높이고, 초기지원 전문담당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적이고 경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함.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건강수준 측정 및 국제비교

김동훈, 박원순, 전용관, 이은영, 이민경

배경 및 목적

·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 관련 3차년도 연구로서, 기존의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넘어 우리나라 유아기의 신체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체건강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유아의 신체건강 관련 정책의 수립,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사회의 24시간 유아 행동습관 가이드라인을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연구방법

· 문헌분석, 신체활동 국제비교 조사 공동참여(SUNRISE 프로젝트), 영유아검진코호트DB 분석, 온라인 부모 설문조사, 자문회의

연구결과

유아 신체건강 및 신체활동 수준 국제비교

· 우리나라 국제비교 대상 유아의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기의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 발달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음.

· 신체활동 측정기기(ActivPal)를 통한 유아 신체활동 주요 분석 결과, 걸음 수는 1일 평균 7,589.3보, 1일 평균 걷는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였음. 만 4-6세 유아의 신체활동 적정수준을 하루 10,000보~14,000보로 제안하고 있는 신체활동 지침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활동이 외국의 권장량보다 다소 떨어짐. 유아의 평균 수면시간은 10-11시간으로 나타났고, 30분 이상의 좌식행동도 1일 2회 이상으로 외국의 정책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아부모 대상 신체활동 온라인 조사 분석결과

· 전체적으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유아는 18.3%였으며, 과체중은 6.3%, 비만은 11.9%로 과체중보다 비만인 비율이 다소 높았음. 또한 3세에서 5세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과체중 이상의 유아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유아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소 좀 더 활동적인 신체놀이가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좌식행동 시간도 늘어가는 경향을 보임.

· 유아의 평균 신체활동 시간은 1일 146.7분(2시간 27분)으로,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만 3-4세는 하루에 적어도 180분(3시간) 이상 활동적인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임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유아들의 신체활동은 외국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앉거나 누워서 전자영상기기를 시청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일 133.5분(2시간 14분)으로 나타나 많은 편임.

· 유아 자녀가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은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71.6%였으며, 주말은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7%로 나타남. 맞벌이 가정유아의 경우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임.

· 유아자녀가 최근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신체활동 사교육이 있다는 비율은 35.4%였으며, 연령이 5세의 비율 49.2%로 다소 높아졌음.

정책 제언

유아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유아의 신체활동, 좌식행동, 수면 등 하루 24시간의 다양한 행동습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요구되며, 유아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등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미세먼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야외에서의 신체활동이 어려울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 놀이·체육 활동 공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유아가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아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자료 개발 및 홍보·캠페인 강화가 요구됨.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신체건강 활성화 제언

· 유아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교사의 신체건강 및 활동에 대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사연수 강화나 신체활동 관련 자격교사에 대한 인력지원이 필요함.

가정에서의 유아 신체건강 활성화 제언

· 유아와 부모의 시간과 장소에 따른 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안내와 교육이 필요함.

· 세계적으로 권장되는 수면시간(1일 10-13시간)과 일정한 취침/기상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최은영, 최효미,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아문화의 창출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7년부터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가 수행될 예정으로,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연구방법

· 문헌 분석: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함.

· 정기 조사: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직업별, 자녀유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수시 조사: 정책현안에 대하여 2회 수시 여론조사를 실시함. 전문조사기관의 패널 중 정책 현안과 유관한 대상과 1차년도에 구성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포함하여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함.

· 심층 면담: 영유아 또는 초등 부모 등 정책수요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 및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 및 현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

· 전문가 협의회: 여론조사의 범위 및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해 육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육아정책 전문가, 관련 선행연구자 중심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함.

·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1차년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쌍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육아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육아정책 등을 홍보함.

연구결과

출산 및 저출산에 대한 의견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별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평균 4.19점~4.36점이었으

며, 정책효과는 2.80~3.02점으로 정책효과를 다소 낮게 인식함.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37.8%)을 제외하면, 43%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

·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육아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양육 효능감(5점 척도)은 3.5점, 양육 스트레스(5점 척도)는 3.1점으로 나타남. 집 또는 주거지 주변의 기관 충분성(5점 척도)과 수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로 평균 1.5개~2.6개로 필요성(7점 척도)은 3.6점~4.1점, 만족도는 2.5점~3점으로 나타남.

육아정책 인지 및 의견

· 비용 지원 정책에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50.1%), 시간제 보육료 지원(51.1%),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9.1%)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1순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인성지도가 40.8%, 어린이집은 안전한 보호가 36.6%로 가장 높았음.

· 시간 지원 정책의 인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0.4%)과 유연근무제(33.8%)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육아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국가 차원의 육아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34.2%로 가장 높았고, 재정 지원 설계의 우선 순위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51%로 나타남.

정책 제언

행복육아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 추진 과제

· 추가 출산의 영향 요인의 다면평가를 통한 육아정책 재설계,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구축,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육아정책 유형별 추진 과제

· 놀이를 통한 영유아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강화, 아동수당 수급대상 및 효과성 검토,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이윤진A, 양미선,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역대 정부에서 육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책효과는 미흡했음. 그러나 육아정책의 분석, 평가에서는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는 육아정책의 모니터링, 평가, 분석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향후 육아정책을 분석, 평가를 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는 5년(2018년~2022년) 연속과제의 1년차 연구로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들 중에서 향후 본 연구에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육아정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며 향후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연구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 교육, 노동, 복지 분야별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현 정부의 주요 육아정책을 선정

· 대국민 의견조사: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 무자녀 기혼 성인과 비혼 성인 500명 등 총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총 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연구결과

핵심육아정책과제 선정 및 중요도 인식 비교

· 10개 핵심육아정책과제를 선정함. 아울러, 2개의 핵심유아교육 정책과 3개의 핵심보육정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최종 15개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 10대 핵심정책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학부모, 원장과 교사, 무자녀 기혼 및 비혼 성인 대상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재원 확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제가 공통적으로 상위 3순위를 차지하였음.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유자녀 성인이 무자녀 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핵심정책과제에서 중요도 점수가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육아’(

유자녀 가구)이며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견고함을 의미함.

· 원장과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설립유형에 따라(국공립 또는 사립/민간), 동일한 핵심과제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있었음.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이란 정책과제에서 국공립 원장과 교사에 비해 사립/민간의 원장과 교사의 점수가 낮았음.

저출산에 대한 인식 비교

· 우리사회의 저출산 요인으로 무자녀 성인은 주거 문제를, 유자녀 학부모는 양육비와 일·육아 병행 문제 해결을, 남성은 양육비 문제를 여성은 일·육아 병행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음.

·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육아정책, 저출산 및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

정책 제언

· 육아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육아정책 목표의 명료화, 다양한 육아정책수요자들의 유목화(grouping), 유목화에 따른 기존 육아정책을 재정비, 중장기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정책 수립 제안

· 선정한 10대 핵심육아정책에 대한 추진방안: 육아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시간 조정,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비용지원, 일반가정에게는 육아서비스 지원 우선 등 정책수요자들의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제공 제안

· 5대 유아교육·보육정책에 대한 추진방안: 유치원은 국공립 기관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유치원 교사 수준의 적정한 처우 보장을 정책방안으로 제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

최효미, 강은진, 조미라, 조숙인,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에서, 영유아 가구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부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관망적 입장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구 대상이 유사하고 설문의 통합이 가능한 연구과제 3개의 실태조사를 하나로 묶어 수행함으로써, 조사 효율성을 제고 하고 조사 자료의 질을 제고함.

연구방법

· 3개 과제 통합 실태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로, 1,648가구(2,277명)

· 가계동향조사 등 2차 자료 분석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및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 개최

연구결과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11만9천원으로, 식비가 81만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용(41만원), 보험금(36만3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32만3천원), 교통비(26만4천원), 주거비(25만3천원) 순임.

-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생활비 지출도 증가함.
- 엥겔 지수는 26.5, 슈바베 지수는 8.7, 엔젤 지수는 29.1임.

· 총 양육비용은 115만1천원이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66만원임.

- 비목별로 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큼.

· 영유아 양육비용은 91만9천원으로, 자녀수가 1명일 때에 비해 2명일 때 증가하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와 3명인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총 자녀수에 따라 식비는 단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피복비와 보험료 등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비해 다른 집단에서 비해 약간 적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영유아 양육비용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측되며,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비목은 교육·보육비임.
-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66만원으로,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함.

· 자녀 양육 시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교육·보육비가 44.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식비(17.7%)임.
- 추가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보육비 투자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가구 전체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91.1%였으며, 항목 간 조정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52.7%, 항목 간 지출 변화가 약간 있었다는 응답이 41.7%임.

· 영유아 가구의 주거·관리비 총액은 25만3천원이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임.
-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가 54.9%,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구입해야한다'가 28.7%로,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육아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비싸다고 느낀 품목은 완구(33.6%), 외출복(28.7%), 도서(21.8%), 기저귀(19.5%), 신발(12.7%)의 순임.

정책 제언

· 취약계층 영유아의 아동권 보호 및 격차 완화 필요

·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 공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지원의 다양화

· 주거비 지원 및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육아 지원 확장 및 정책 홍보,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배경 및 목적

·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영유아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실제 양육 형태의 선택 간 간극을 살펴보고, 잠재적 이용 욕구를 포함한 진정한 수요를 파악함.

· 인구변동, 사회 정책적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동에 따른 육아서비스에 대한 선호 변화와 수요 변동을 예측, 향후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육아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연구동향 분석

· 3개 과제의 통합 조사인 KICCE소비실태조사 수행 및 분석

·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육아서비스 특수 수요층의 부모 심층 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육아서비스 공급자 간담회 등 실시

연구결과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는 부모

·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부모가 95.1%, 조부모 4.5%, 타인 0.3%, 조부모 외 기타 친인척이 0.2%로 나타남.

영유아 가구를 위한 보편적 육아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반일제 이상 기관

· 전체 영유아 중 절반 이상인 51.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27.8%,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이 17.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 3.3%로 나타남.

키즈카페 이용의 보편화

·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 이용률이 66.8%, 공공부문 육아카페 3.5%,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4.3%가 이용함.

영유아 연령에 따른 이상적 육아서비스 이용의 차별화

· 부모들이 생각하는 영유아 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는 자녀 0~1세 때는 '부모 직접 돌

봄', 만 2~4세는 '어린이집 이용', 5세~6세는 유치원 이용으로 나타남.

초등학생의 돌봄 인프라로 이용되는 '학원'

·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은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6.7%, 방과 후 교실 이용 30.3%, 초등학교 돌봄교실 16.8%, 부모직접돌봄 13.1% 순으로 응답됨.

정책 제언

기본 방향

· 육아서비스 인프라의 충분성 확보

·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

· 육아서비스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

·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 수요자의 육아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령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연령별 수요가 집중되는 육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수요변동의 대응성 강화 전략으로 양적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수요 예측과 필요 재정 규모, 필요 공급량에 자동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육아서비스 욕구가 차별화되는 영유아 가구 유형별 통계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반영함.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부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함.

· 현금 지원에서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하하고 목적에 따라 지급수준 조정.

· 개별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접근성을 제고함.

· 부모돌봄시간 지원 분야에서는 사회문화적지지 기반의 확대와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접근성 제고 필요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박진아, 박상신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2년 영유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육아지원설계의 다양화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함.

·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이며 저출산과 교육·보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요구됨.

· 정부지원정책이 실제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육아품목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정책적 효과와 물가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 육아물가 시장조사

· 영유아 부모조사

연구결과

KICCE 육아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 KICCE 육아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과 비교하여 분유, 기저귀, 유모차, 유치원 순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고, 의류 및 신발 관련 서비스, 우유, 이유식, 장난감, 유치원추가비용, 영유아영어학원, 어린이집추가비용, 산후조리원 등의 지출 비중이 증가함.

· 육아품목의 지출비중 변화는 영유아 가구의 지출비용과 이용하는 구매율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음.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

· 2018년 기준의 가중치와 일부 품목 개편으로 인해 KICCE 육아물가지수(Ⅱ, Ⅲ-1,Ⅲ-2)의 전체 지수 변동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으나, 품목별 변동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영유아 부모 체감 물가 산출

· 영유아부모는 소비재-내구재-서비스재 모두에서 가격체감과 가계부담에 대한 부정응답 정도가 낮은 경향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음.

· 2018년 새롭게 구축된 패널의 향후 육아물가체감지수 변화를 선행연구의 변화 추이와 함께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할 있음.

정책 제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의 지역 격차 해소

· 단기적으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과 지자체 특수시책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장기적으로 현재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정책 설계의 보완

· 현재 비용 지원 체계 기준인 기관 이용 여부를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보완하여 통합적인 비용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지원시간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기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질과 내용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 체계 도입

· 영유아 가구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도우미에게 지출하는 비용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이용과 민간서비스 이용의 비용 차이는 크게 나타남.

·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는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 수요에 비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함.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육아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영유아 부모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포함한 대국민 대상의 사업 확장이 필요함.

· 다양한 육아박람회는 영유아 부모로 하여금 양육비를 과하게 지출하도록 유인하는 역기능도 존재하므로, 영유아 발달 시기에 따른 육아 필수재 중심의 작은 육아 박람회 개최를 제안함.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박원순, 이재희, 예한나

배경 및 목적

· 시대에 따라 변화된 부모교육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부모 세대로부터 부모 역할을 배우기 어려움.
  - 가정 내에서 부모 간의 역할이 전통과 많이 다름.
  -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육아가 쉽지 않음.

· 부모교육은 더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함.
  - 맞벌이 부모들이 주로 평일 낮에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움.
  -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교육은 맞벌이 중에서도 더욱 드묾.

연구결과

·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 특히 아버지들은 부모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절반 정도(45.5%)였음.
  - 부모교육에 불참했던 이유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과반(57.9%)이었으며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가 그 뒤를 이었음(26.3%).

· 심층면담의 분석을 통해서 참여부모들은 부모교육의 정보가 부족함, 과도한 역할 부과, 시간의 부족을 호소
  -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와 시간, 인적자원의 부족하다는 진술
  -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에게 과도한 역할 요구
  - 부모 역할의 수행에 자신감이 없으며 투자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만족도
  - 부모 역할 및 부모교육을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

· 부모교육 실시에 따른 부모 인식의 변화
  - 부모교육을 실시한 이후 참여한 부모의 양육불안감 및 양육 관심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양육 유능감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맞벌이 부모를 위한 5개의 부모교육 시범사업팀 운영
  -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기관의 부모를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에 부모교육 실시

· 아버지를 위한 5개의 부모교육 시범사업팀 운영

- 캠핑장, 지역 기반 직장인 모임, 기업 내, 유치원, 전일제 학원의 영유아 부모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정책 제언

·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성공은 다음에 기인함.

- 5~6명 혹은 5~6가정 수준의 소집단 구성
- 양질의 부모교육 교재(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의 사용으로 프로그램 개발시간 단축
- 남자들의 자유로운 육아 수다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육아문제의 대안 모색, 육아 정보 공유

·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성공은 다음에 기인함.

-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부모교육의 횟수는 5회 이상으로 계획했으나 5회를 초과한 부모교육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움.
- 많은 기관 및 단체에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혹은 격주로 열리는 부모교육을 5회 이상 참가하려는 부모가 많지 않아 신청률 및 참여율이 낮음.
- 사정에 따라 중집단 혹은 대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소집단에 비하여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을 위해서는 시간지원, 비용지원, 전달체계의 확충이 필요함.

·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좋은 아빠 역할을 하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권위적이기보다는 민주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음.
- 부모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풍토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음.
- 부모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구성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음.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 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2014년도에 만 5세 대상으로만 구축하였던 전산 구축 사업을 만 3, 4, 5세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 개발된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전산을 시험적으로 연령을 확대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누리과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평정 점수를 활용하여 누리과정 도입 취지인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평정 점수에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아 특성, 가족 특성, 교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밝힘으로서 누리과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누리과정의 전반적인 개요, 누리과정 정책, 국내외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관한 효과성 연구,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시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사 변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음.

· 연구 방향 및 방법, 정책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총 5회 개최되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아평가 방법 및 도구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된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현장 활용도에 관한 파악 등을 위해 원장 대상 간담회가 1회 개최되었음.

·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5세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5개 누리과정 영역별 성취 및 행동 변화 정도를 사전(5~6월) 및 사후(10월) 2차례에 걸쳐 평정하도록 함.

연구결과

<u>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누리과정 효과성</u>

· 저소득, 다문화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점수가 비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취약계층 유아의 관찰척도 점수가 신체운동건강영역을 제외한,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같은 4개 영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만 3~세 누리과정 효과성

· 유아자유선택활동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많은 집단이 자유시간이 적은 집단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탐구 영역의 점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여아의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은 유아의 관찰척도 점수가 가구소득이 낮은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점수가 다른 기관 유형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비해 높음.
·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교사 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가 높을수록 만4, 5세 유아의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높음.

정책 제언

취약계층 가정 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방안

·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개별 지원 교육 제공
·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유아 가정 부모와의 협력 연계
·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유아 개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 연계
·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발달과 가족 상황이 반영된 누리과정 편성 및 운영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지원 강화 방안

· 연령별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사지원
· 교사 특성을 반영한 교수방법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기관별 격차해소를 위한 교사 지원
·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
·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 관한 교수 방법 지원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기준 명료화 방안

· 자유선택활동 시간 확보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어플리케이션 및 전산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누리과정 효과(유아교육 효과)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문무경, 이윤진A, 조미라, 조숙인, 이솔미, Maki Hayashikawa, Kyung Ah Kristy Bang, Cliff Meyers, Evelyn Santiago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초중등생 중심이며 현재까지 취학 전 부문의 개발협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발전 경험, 성공사례와 제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아태지역 개도국의 육아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 아태지역 3개국(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육아정책 부문의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선정국의 세부 개발협력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방법

문헌연구

· 국내외 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콘소시엄 구성

· 국내 전문가 면담 및 조사 실시 & 선정국별 현지 면담조사 및 관찰 실시

· 국가별, 설립유형 및 소재지별로 현지의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4~6개 기관씩 방문 및 면담

온라인 협의회 개최

정책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국가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 우즈베키스탄: 법적 기반 마련, 유치원 확충, 교사 수급을 위한 양성교육, 교육과정의 다양성, 서비스 질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베트남: 법제도적 장치, 예산의 확대, ECEC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교사역량 강화,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특수아 지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피지: 시설기준 마련 및 투입 재정, 교사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질,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공통적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 구조적 요인: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투자 확대

· 과정적인 질, 시설설비 기준 및 규정 마련과 인프라 구축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 컨설팅 모델(안);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진단 및 우선순위 선정, 세부 실태조사 및 실행과제 도출, 전략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영향 평가

· 컨설팅 영역: SDG 4.2 달성을 위하여 제3차 아태지역 장차관포럼에서 발표한 5가지 우선적인 정책 영역: 1) 재정투자 확대, 2) 다부문간의 조정과 협력, 3)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 4) 질적 제고, 5) SDG 4.2 이행 모니터링

정책 제언

· 전반적 고려사항: 1) 개발협력 대상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자료 수집 축적, 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관련 선정국의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3)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대정부 제안사항: 1)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정부부처의 합의와 방향성 필요, 2) 육아정책 개발협력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체계화, 3) 국제수준에서 발표된 주제별 세부 성과지표에 기초한 찾아가는 육아정책 개발협력 활성화, 4) 우리나라의 장점을 전수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형태 발굴, 5) 전문가 양성 및 현지 지원인력 확보, 6) 국제기구와의 협업 강화, 7) 성과평가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등 관련 연구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Ⅲ)

권미경, 이미화, 조숙인, 조미라, 윤지연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의 질 관리는 평가인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17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지표를 적용하는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진행 중임. 평가로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와 자체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함.

· 조력, 컨설팅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연구'를 2016년부터 5차년 계획으로 기획하였고,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로 제3차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ARE 컨설팅을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 어린이집 질 관리 방안으로의 컨설팅 모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컨설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ECEC 질 관리 도구로의 평가 활용에 대한 국외자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등을 고찰함.

· 어린이집 평가 연계 CARE 컨설팅 모형 및 운영 체계를 수정하고 컨설팅 매뉴얼을 수정함.

·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동하여 사업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3차 평가인증을 받은 8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함.

· 컨설팅 시범사업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컨설턴트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함.

연구결과

3차 년도 CARE컨설팅 시범적용이 지니는 함의

·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한 컨설팅으로컨설팅 출발점 진단을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서 시작함.

· 어린이집 지원 주체 간 협업으로 추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청 보육담당부서와 학계전문가 등이 협업함.

3차 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결과 분석

· 2018년도 CARE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와 컨설팅 모형과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토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책 제언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을 앞둔 시점으로 평가인증 결과로부터 출발하는 컨설팅 운영체계 준비가 필요함.

· 기존 컨설팅 내용에 대한 중복을 배제하고 컨설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 중인 컨설팅과 연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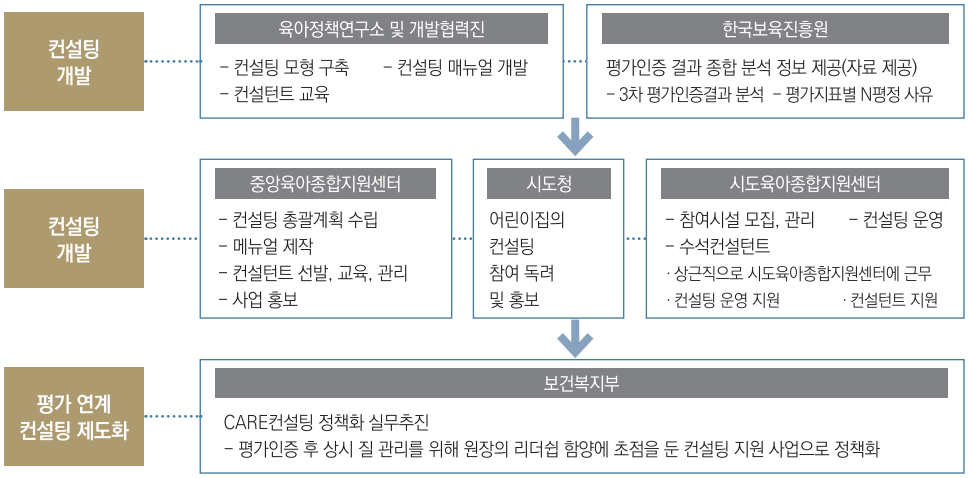
· 평가 결과가 낮은 어린이집의 컨설팅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방법(인센티브)을 찾아야함.

· 어린이집에 부담되지 않고, 보육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로 여겨지지 않도록 컨설팅을 추진해야함.

·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의 발굴과 컨설턴트 풀(Pool)을 유지해야함.

·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CARE 컨설팅이 제도화 되도록 실무(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속 추진이 필요함.

· CARE컨설팅 제도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Ⅱ)

도남희, 이정원, 김지현, 조혜주, 박은영,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에 부응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의 확대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자 함.

· 아동의 가정 및 학교 경험과 초등학생의 전반적 발달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환경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아동 발달에 적합한 정책 설립의 방향성 모색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전문가 회의

· 패널조사 수행 – 아동 조사 문항 확대, 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 대상 조사 실시

· 9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10차년도 횡단 가중치 및 1~9차년도 종단 가중치 생성

· 10차년도 자료 정리 및 기초분석

연구결과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 총 패널 2,150명 중 1,434명 조사 완료. 전년도 대비 96.6%, 전체 패널 대비 66.7%임.

아동의 일상 생활

· 아동은 주중에 오후 9시 58분에 잠들어 7시 26분에 깨어나 평균 9.29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약간 더 많이 자고 있었음.

· 아동의 평일 하루 활동 시간은 학교 활동 5.80시간, 사교육 1.87시간, 기본생활 시간 1.47시간, 숙제 및 학습시간 0.89시간으로 나타남.

· 평균 주중 0.95시간, 주말 2.24시간 가량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0%의 아동이 휴대폰(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음.

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

· 평균 신체 계측은 체중 33.17kg, 신장 135.33cm, 허리둘레 64.77cm로 나타남.

· 조사 대상의 20.5%가 안경을 착용하며 0.75개의 충치가 있었음.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

· 아동의 집행기능은 중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도형창의성 검사 결과, 독창성 수준이 가정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7점, 전반적 행복감은 3.32점으로 나타남.

그 밖에 부모, 가구,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육아정책 특성에 관한 조사결과 제시함.

공공데이터 개방 구축사업

· 한국아동패널이 10년간 구축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서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함.

· 공공데이터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학술기관과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함.

정책 제언

· 미디어 중독 예방에 대한 안내와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노력이 필요함.

· 취업모의 양육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조언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 배치가 필요함.

·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부모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함.

· 종단연구의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종단연구의 데이터 관리 지원과 DB 구축이 필요함.

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방안

김은영, 박원순, 김혜진

배경 및 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영유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영유아 적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반하여 영유아 조기교육이 성행하고 있음.

· 영유아기에 지나친 학습에 노출시키는 것은 영유아 조기교육의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떠나 영유아기에 누려야 할 충분한 휴식과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적기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대비되는 조기교육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며, 영유아 적기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영유아 조기교육 형황 및 적기교육 관련 문헌 정리

· 국민참여 워크숍: 취학전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인식과 애로점을 살펴보고자 영유아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5차례 실시

· 홍보자료 개발: 동영상, 카드뉴스

연구결과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사교육 선택

·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조기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근거 부족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대상별 인식

· 청소년: 영어를 포함한 유아기의 학습이 재미가 없고 싫었던 기억이 있음.

· 교사: 방과후 영어교육이 부모의 불안을 일부 잠재울 수는 있으나 그다지 효과는 없으며, 일부 유아를 제외하고 다른 활동보다 흥미를 보이지 않음.

· 전문가: 영유아기에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대신하여 지나친 조기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영유아의 뇌를 지치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적기교육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방안

· 정부가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고 적기교육의 콘텐츠 제공
·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 교육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회 제고
· 데이터 분석 및 사례 제시를 통한 설득

정책 제언

· 영유아 특성, 영유아 적기교육, 미래 인재상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적기교육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유아 대상 학원이 학습을 위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방과후과정과 프로그램 모두 놀이 중심으로 편성하여 영유아의 자율성, 호기심,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지원
· 취학 전에 마음껏 놀아도 초등학교 입학 시 적응에 무리가 없도록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초등교육과정 정비
· 초·중등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큰 그림과 학년별 로드맵을 제시하여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
·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안정화를 통해 부모의 불안감을 감소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직업 간 급여 편차를 최소화하여 부모들이 자녀에게 소위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원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 유치원 한국어 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

권미경, 최인화, 최윤경B

배경 및 목적

·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유치원에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유아의 취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유아에 대한 한국어(KSL)[1] 교육 지원에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유치원 '예비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로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초·중·고 예비학교 및 한국어학급(특별학급) 설치 기준, 외국인가정, 다문화 유치원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 온라인 검색, 현지 거주 전문가를 통해 국외 언어지원 사례(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를 검토함.

· 현재 유아교육에서 한국어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유치원 한국어교육 모형 제안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2회)로 유치원에서의 유아 한국어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한국어학급 설치 방안을 논의함.

연구결과

한국어교육 지원 법적 기초

·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다문화 유치원 운영 현황

· 교육부는 다문화유아의 발달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유치원을 2018년 기준 전국 131개원 운영 중임.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요구

· 한국어교육, 언어교육은 교육현장인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임.

1)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은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함.

·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아용 교재 및 활동 개발, 외국인가정 유아 한국어 능력을 진단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함.

정책 제언

· 유치원의 한국어교육 지원은 참여대상 학생 수, 전담교원 유무, 유치원의 규모나 설립유형 등 반영하여야함.

· 유치원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유아용 언어발달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학급당 유아 수를 현재 보다 줄여서 배치, 순회형 한국어교육 지원, 교육청별 지원 인력풀 구성,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교원 직무 구체화, 초·중·고 다문화 예비학교와의 연계,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한 언어지원, 가정과의 연계 지원 등을 제언함.

· 유치원 한국어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한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인 교육부 수준, 교육청 수준, 개별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교육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개별유치원
진단도구개발	·외국인 유아용 한국어 진단 도구 개발	·한국어 진단도구 보급	·한국어 진단도구 활용 진단
한국어 교재 및 자료개발	·한국어 교재 및 자료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개발 연구유치원 지정	·우수사례 제공 ·사용 후 피드백 제공
심리 정서적 지원		·교사 대응 안내서 구성	·지원적인 유치원 분위기 및 환경 조성
학급당 유아 수 조정	·기준마련	·시도별 현황 반영 운영지침 제시	
순회형 한국어교육 지원	·순회형 운영방안 수립	·교사 채용 및 파견 계획수립, 운용	·이용 대상자 추천
한국어교육지원 인력풀 구성	·기준마련/인력 제공안 수립	·시도별 현황 반영 운영지침 제시	
교사전문성 향상	·교사양성 기준에 반영	·교사 연수, 교육기회 제공	·구체적 수요 정보제공
교원 직무 구체화	·교원 직무 기준마련		·현장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예비학교와의 연계	·연계 기준 마련	·다면적 연계 발안 구체화 제시	
다문화 지원센터와의 연계	· 부처별 협력활성화 방안모색	·협력 가능한 지원체 현황 파악 및 다면적인 협력강화 방안 마련	·연계 및 협력 우수 사례 제공
가정과의 연계 지원		·연계 우수사례 발굴 ·연계 안내서 구성	·우수사례 제공 ·연계 활동 활용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박창현, 김근진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충과 교육자치 및 분권화·지역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지역별, 규모별로 정원이 미충족된 국공립 유치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실행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해 정원 미충족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알맞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 조사, GIS 빅데이터 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13년 21.6%, 2015년 23.6%, 2017년에는 25% 수준임.

  - 2016년 기준으로 OECD 35개 국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평균은 67%, 유럽연합 22개 국가의 평균은 54%에 달함(OECD, 2018b: 177). OECD 35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국가는 호주(16%), 뉴질랜드(1%), 아일랜드(2%)의 3개 국가 뿐임.

· 국·공립 유치원 정원 충족률 평균은 약 79%임. 정원 충족률이 가장 낮은 교육청(지역)은 경상북도로 66.3%임. 정원 충족률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91.2%)임. 대부분 70~80%대의 정원 충족률을 나타냄.

· 시·도별 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유아 수 감소, 통학차량 미운행,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과다, 짧은 운영시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미운영, 유치원 교육활동 홍보 부족, 방학 중 급식실 미운영 등으로 정원이 미충족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첫째, 시·도교육청과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통폐합,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방과 후 급식 제공, 통학버스 제공, 노후된 시설 개선, 학부모 요구 반영, 유치원 교육과정 홍보, 교사 대 유아비율 감소 등을 제안함. 둘째,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정책, 폐교 리모델링,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통학버스 운영, 교사 대 유아비율 감축, 국·공립 유치원 질 제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

정책 제언

정책방향

· 국·공립 유치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되어야하고, 지역별 유아교육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과제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유아가 없는 지역은 통폐합하여 통합 단설 또는 통합 병설 유치원, 다학급 병설 유치원, 폐교 리모델링 등 국·공립 유치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하여 국·공립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제안

· 사립 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도심 인근에 위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 수 감소와 경영난으로 어려운 유치원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

·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 운영 제도 구축: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와 통합 운영, 공동 미니버스 지원 등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관리하도록 함. 통학버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튼튼한 통학버스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추후 제시할 필요

·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표준 교육시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과정 시간 연장의 가능성 제고

·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자를 확대 하거나 전면 허용하도록 하여 부모가 원하면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교사 대 유아 비율을 1:15까지 줄이고, 보조인력(부담임, 보조교사)을 배치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유치원 조직문화도 보다 민주적이고, 유연하게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친근하고, 위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문화개선이 필요

· 중장기 방안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를 90% 이상 확충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유-보통합형 인정어린이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도 벤치마킹 필요

· 향후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설립 정책은 출산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인구정책과 도시개발 정책 시 국·공립 유치원 우선 지원 정책, 어린이집 40% 확충 방안 마련 시 지역의 여건 고려 등을 고려한 보다 통합된 시각 필요

사회권으로서의 육아권 정립과 실현 방안 연구 –

김아름, 김정현, 이민경

배경 및 목적

·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국고가 이미 131조 이상 지출되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연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막대한 예산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통계학적 인구의 감소, 노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기존 세대의 연금문제 등의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임.

· 당장에 혁신적 해답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는 최소 20년 이후라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위기(초고령사회진입, 생산인구감소 등)'로 봐야함.

·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단순하게 법률로서 보장되던 복지적 차원의 육아지원 문제를 이제는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관점에서 법적·사회적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논함.

연구방법

· 우리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헌법 등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 등을 통하여 이론적·실무적 연구의 방향과 보장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연구결과

육아보장의 법적 근거

· 헌법적 근거: 제31조 제2항(자녀의 교육의무), 제34조 제3항(여성복지권의 향상)/제4항(청소년 복지 향상 정책 실시의무), 제36조 제1항(혼인·가족의 보호)/제2항(모성보호)

· 개별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약 11개 법률에서 노동시간, 육아휴직, 세제혜택, 지원금 등의 개별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의 육아현실

·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주거 마련 등으로 이미 결혼단계에서부터 경제적 부담(결혼에 약 2억 3천만원 이상 지출)을 안고 출발함.

· 실제 육아비용도 아이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 가구평균소득의 약 1/3이상(107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육아물가지수는 다른 생활물가에 비하여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동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육아에 대한 직장 내 눈치주기 등 비협조적인

문화가 여전하고, 직업, 신분 등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공무원 3년, 민간기업 1년)의 차이 등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환경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육아권 실현에 한계가 있음.

· 한편, 비혼가정 자녀 등은 사회적 차별로 OECD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로 나타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육아권

· 무엇보다 노동시간, 증가하는 양육비와 같은 사회구조가 모성권과 같은 인격권 발현을 저해한다면, 기본권 회복이라는 이론적 가치에 의해 새로운 권리 창설이 필요.

· 육아는 온전한 부모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는 누구나 아동이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 아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함.

· 육아권이 헌법상 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구현은 입법자(국회, 정부)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수립만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정책 제언

기존 헌법의 확대해석

· 육아권을 도출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헌법해석을 통한 육아권의 정립을 모색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적·정치적 복잡성에 기인한 것임.

·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정립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새로운 기본권의 창설에는 찬반의 대립이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의 수립을 위해 시대적 상황, 사회 환경의 변화, 현행 헌법으로서의 문제해결의 가능성 여부, 개별 법률을 통한 해결 가능성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기본권 수립

· 헌법 개정을 통해 육아권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헌법 제00조 (육아의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아동은 보호자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입법을 통해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이윤진B, 장희선, 박은영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이해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와 수준이 가정 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 학부모, 교직원의 세 당사자가 등장함에 따라 각각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과 대응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연구방법

·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과 교사, 영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사전 대응 방법과 욕구, 사후 대응 방법과 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아동학대 사전-사후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를 개발함.

연구결과

학부모 입장 요구 사항

· 학대의 의심은 교사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하게 되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학대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

· 사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요구

원장 및 교사 요구 사항

· 아동 학대를 예방을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

· 사후 대응과 관련하여 CCTV가 존재하긴 하지만 객관적 제3자가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 1) 매뉴얼의 실용적 보급, 2) 아동학대 중재기구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배포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함.

· 아동학대 중재센터(가칭) 는 아동학대 각 개별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각 당사자 인터뷰 결과 제 3의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정원, 최효미,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를 파악, 서비스 확대의 실증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 통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를 분석함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2,020사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간담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아이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

· 대상 가구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7.6%로 높은 편이나,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5.9%에 불과하였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도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로 나타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응답자 중 12.9%만이 과거 및 현재 이용 경험이 있었음. 이에 반해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경험은 22.3%임.

높은 부모 취업 활동 지원 기능

·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된 이용 이유는 '부모의 취업'이며 이외 긴급 돌봄에 대한 욕구가 드러남.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 응답대상가구 중 47.0%가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정부 지원 내용 인지에 따른 이용 의향 변화

· 과거 미신청자 중 세부 정부지원에 대해 인지가 낮고 이용 의향이 없었던 응답자 중 정부 지원 인지에 따라 이용 의향이 발생한 경우가 24.8%로 집계됨.

2018-2019 단기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예측

· 2011~201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 이용률은 2018년 1.51%, 2019년 1.54%로 소폭 증가하며, 이용자 수는 2018년 9만551명, 2019년 9만 2,814명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 뚜렷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은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자격기준 강화'(93.4%),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제고'(91.5%) 순으로 개선을 요구하여 양적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여 줌.

정책 제언

·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비스 대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수요로부터 서비스의 필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서비스 확충 규모 파악 과 더불어 '급여 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인력 유입, 양성 확대'가 필요함.

·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서비스 단가 상향, 단시간 활동 돌보미를 위한 부대 비용 지원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의 공급을 확대해야 함.

· 이용자 부담과 직결되는 시간당 단가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아이돌보미의 급여를 우회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이돌보미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질 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의 균질화, 민간서비스 장점 벤치마킹 등 질 관리 방안 마련되어야 함.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등록제 추진 방안 연구

이정림, 하은희,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의 양적 감소를 줄이는 정책만큼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먼저 임신·출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구정책의 기본 요건임.

· 현행법상 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서 영아유기, 신생아 매매,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례로 연계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가 당면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써 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써의 임신·출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임산부등록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국내외 임신 및 출산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자료 검토 및 분석

· 산부인과 의사, 관련 선행연구자 대상의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서울, 강원, 전남지역 소재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상의 초점집단면접(5명) 및 서면 조사(6명) 실시

· 전국의 임신부 및 영아 어머니 200여명(임신부 48명, 영아 어머니 196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연구결과

임산부 및 영아 어머니 대상 출생신고 및 임산부등록제에 관한 인식 및 요구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시스템'에 약 90%가 찬성하였음.

· 의료기관이 출산관련 자료를 보건소에 제공하는 것에 약 90%가 찬성하였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과 출생신고정보의 연동에 대부분 찬성(86.4%)하였고, 반대는 6.1%였음.

임산부 및 출생아 등록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

· 대다수는 현행 분절된 임신확인 및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등록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



· 임신 및 출생 관련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였고, 다만 추가등록정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정책 제언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등록 체계 통합 방안

· 임신-출산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마련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 부서 마련이 필요함.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록

·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록 주체는 의료 기관이어야 함.

·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함.

임산부등록제 추진을 위한 제도 및 법 근거 마련

· 임신 및 출산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 부모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출생아 등록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의 개정 필요

임산부등록제 추진을 위한 TFT 구성

· 관련 부처(복지부, 법무부 등),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자, IT 전문가, 통계, 의료, 보건, 법률, 사회, 교육 분야 등 전문가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함.

임신 및 출생 관련 서식 및 지침 마련

· 임신 및 출생 관련 등록 내용에 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및 등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지침 마련이 필요함.

임산부등록제 추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임산부등록제 추진의 목적과 배경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정보 제공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수혜 정책 및 서비스 내용, 개인정보 보완을 위한 장치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어린이집 오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강은진, 최경, 이유진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맞춤반(기본 6시간, 9시~15시)과 종일반(12시간)으로 운영하던 기존 체계를 기본보육시간(7시간, 9시~16시)과 연장보육시간(16시 이후)으로 전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오후 보육 내실화를 위한 오후 보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자 하고, 오후 보육 운영을 위하여 오후 보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로서 어린이집 시간 연장, 종일반 운영 및 특별활동 운영 현황,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부 종일제 인증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함.

· 어린이집 788개소 대상(원장 응답) 설문을 통한 오후 보육 운영 실태 및 오후 보육 시 보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

연구결과

어린이집 오후 통합보육 운영 실태 결과

· '영아반, 유아반으로 구별하여 통합보육'하는 경우가 75.6%임. 영유아 혼합연령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는 24.4%임. 오후 통합보육 시작시간은 1순위가 17:00, 2순위가 16:30, 3순위가 16:00로 나타남.

· 통합보육 담당 교사는 '당번을 맡은 담임교사'가 86.5%로 가장 높음. 통합보육 공간으로 당일 담당 담임교사의 보육실이 가장 많으며, 직장어린이집은 통합보육 전용교실이나 유희실 등 특정교실을 이용하기도 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합보육 전용교실,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음.

· 오후 통합보육 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이 1순위이며, 가정에서와 같은 보육환경 조성, 오전-오후 보육 프로그램 간 연계가 그 다음 순임.

오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구

· 오후 통합보육 프로그램 도입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동 1순위로는 '영유아의 자유놀이'가 38.6%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건강, 위생 관리'(30.2%)였음.

· 오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별도의 담당인력이 지원될 경우, 해당 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57.1%)이라고 응답함. 오후 통합보육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역할로는 ' 영유아에게 안전한 돌봄 제공'(41.1%), '영유아의 발달활동 지도'(24.2%), '오전 보육 프로그램과 오후 보육 프로그램 간의 연계'(23.0%)가 요구됨.

오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제안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오후 보육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 오후보육시간 운영을 위한 담당인력으로 오후 담임교사를 제안함. 오후 담임교사를 근무시간에 따라 6시간 근무자, 8시간 근무자로 구분하여 제안하며, 그에 따른 근로시간별 역할을 제안함.



오후 보육프로그램(안)

· 오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 구성으로 별도의 공간을 배치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쉼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쉬는 영역의 별도 배치, 혼합연령 시 낮은 연령 기준의 흥미영역 구성 및 안전관리 기준 제시가 필요함.

· 혼합연령반을 기준으로 0-1세(오감각놀이), 1-2세(신체·언어놀이), 2-3세(언어·역할놀이), 3-4세(상상예술놀이), 4-5세(사고력놀이), 3-5세(창의표현놀이) 등 연령대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중심으로 오후 통합보육의 프로그램을 제안함.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Ⅰ)

도남희, 문무경, 김병철, 이연화, 박상신

배경 및 목적

·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2013년 1.32%),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출산율 감소 현상은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안임. 그러나 각국의 저출산 현상은 결과적으로 동일할 뿐, 원인과 대응방식에는 차이를 보여 왔음.

·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배경과 정책 추이를 파악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 공동연구진으로 구성 협조체계 구축

· 국외사례 수집(국외출장)

·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전략은 중앙부처의 주도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으로 대응함.

  -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임.

  - 최근 현금지원정책으로 세제개선, 양육수당, 아동수당 도입이 있음.

· 중국은 전체 인구는 증가하나 자연증가율은 증가추세가 느려짐.

  - 저출산 원인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임 연령 여성인구 감소, 출산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 부족, 일-가정 병행 문제 심화 등임.

  - 최근 제한적 두 자녀 정책에서 전면적 두자녀 정책으로 변화하고 출산 및 사회서비스 정책 강화로 대응함.

· 일본의 저출산에 대해 정책 반성을 통해 프레임의 수정 및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됨.
  - 저출산 원인으로는 젠더 체계와 가족 형성, 고용시스템,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한계 등임.
  - 점진적 대응, 보육의 시장화, 여성과 청년의 고용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정책 제언

· 한국은 2015년에 계획된 제3차 기본계획을 이전의 출산율 중심의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자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를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저출산에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의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임. 또한, 일부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 관련 모성휴가제도, 출산 보험 등이 실시되고 있음.

· 일본은 2015년부터 특임장관인 일억총활약상을 임명하여 저출산에 대응하는 총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 기회 확대, 경제적 생활 기반 강화, 일·생활 균형 강화, 육아 부담 완화 등에 주력하고 있음.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이정원, 김나영, 김미곤, 김영옥, 김은실, 손인숙, 양옥승, 정재훈, 천현숙, 최영,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육아정책의 수요자이며 대상자인 아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음.

· 초저출산의 상황에서 육아정책의 의미, 육아정책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필요함.

· 포용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육아정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4회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개최, 육아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조사: 8개 분야(가족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건의료학, 사회/사회복지학, 여성학, 기타) 전문가 60명 대상 전문가 조사 실시

·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결과

육아정책에 대한 8개 전문 분야의 관점에서의 이슈 제기

· 영유아발달·교육, 아동권리·복지, 가족, 경제, 모자보건, 지역, 문화적 관점에서의 육아정책 이슈를 제기함.

'여성' 중심의 육아 역할 지원에서 '아동' 중심의 육아정책 지향으로 전환

'보육·유아교육' 정책 중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육아정책의 대상 연령 확대

· 대상연령을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 출산 후에 한정한 육아정책에서 자녀 임신 후 출산 전까지를 포함한 육아정책으로 육아정책의 포괄 시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분야와의 융합과 연계를 통한 육아정책의 효율화

· '일-가정 양립 정책 분야', '아동의 권리·복지 정책 분야', '가족 복지 정책 분야', '고용·노동 정책 분야'와 연계·융합한 육아정책 지향이 필요함.



아동 대상별 육아정책의 충분성과 필요성 파악

· 기아, 유기아동, 방임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부모 아동, 미혼부모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육아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평가됨.

· 방임아동,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육아정책 보완 필요성이 가장 높음.

가족유형별 육아정책의 충분성과 필요성

·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가족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육아정책의 지원 부족. 미혼부모 가족, 장애부모가족에 대한 육아정책 보완 필요성이 높음.

정책 제언

육아정책의 사회적 기본 기능 유지 및 방법적 측면의 전환 필요

· 출산 대책으로서의 '도구적 육아정책'에서 '육아' 자체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으로 전환

· 정부와 가족 중심의 육아정책에서 정부, 가족,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의 주체가 되는 육아정책으로 전환

· 보육·유아교육을 기반으로 한 육아정책에서 관련 학문간 융합과 연계를 통해 육아정책의 대상 범위 확대

·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육아정책에서 보편적 육아정책으로 지속 발전

초저출사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하 육아정책의 과제

· 근로환경 개선과 연계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육아정책의 청년 지원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육아정책 대상별 사각지대 해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활동

· 주요 행사
· 주요 간행물

1.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18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1회의 국제심포지엄을 포함,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아동, 가족, 지역사회, 기업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3. 27(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발표: 김아름 부연구위원, 강은진 연구위원 토론: 윤혜미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안재진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이순기 부장(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성은현 교수(호서대 유아교육학과)
제2차	2018. 5. 9(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1세션] 발표: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송이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토론: 최 영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정영모 교수(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2세션] 발표: 이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홍승아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김혜준 대표((사)함께하는 아버지들) 최숙희 교수(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허미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제3차	2018. 7. 18(수) 서울시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발표: 박영주 센터장(성북아동청소년센터) 윤경아 대표(YMCA서울아가야) 김하진 센터장(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선영 교수(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정영모 교수(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이정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4차	2018. 9. 12(수)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Toward a Childbirth and Childcare Friendly Workplace and Society	발표: Mathijn Wilkens, Research Officer(Eurofound) Erica Lindahl 교수(Uppsala University) Sachiko Nozawa 교수(東京大学)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대표(제이앤컨설팅) 김성식 대표(ESE harmony 컨설팅) 오승희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1차 심포지엄



제2차 심포지엄



제3차 심포지엄



제4차 심포지엄

2.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존 '육아선진화네트워크'를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워크'로 변경하고, 1회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포럼」을 개최하였다. 유아교육·보육 단체 중심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산·학·연 유관기관 33개 기관으로 확장하여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함으로써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였다. 육아정책 이슈 발굴과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개최된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창립대회에는 한국아동학회 등 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SBS 등 언론,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준공공기관 대표 14인이 참석하였다. 각 기관의 현황 소개와 함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및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9. 18(화) 엘타워 5층 멜론홀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창립대회 및 아젠다 발굴	발표: 이두갑 교수(서울대 서양사학과 과학기술사 협동과정) 참석: 송하나 부회장(한국아동학회) 유구종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안 석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혜 본부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미진 연구사(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영진 전문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김용희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엄미선 회장(한국국공립교원연합회) 이정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효선 대표이사(여성신문) 성영준 국장(SBS 시사교양본부 사회공한담당) 홍유진 실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협력실) 조경애 사무총장(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

3.
KAL 열린토론회 및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KAL(KICCE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의 일환으로 총 5회의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부모, 현장전문가, 정부부처, 시민사회, 언론, 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AL 현장간담회는 KAL 열린토론회의 후속 기획으로, 소장 및 원내 연구진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구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 7회에 걸쳐 비혼 부모, 농산어촌 거주 가구, 다문화 한부모 가구 등 정책수요자 집단별에 맞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개별 요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KAL 열린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2차	2018. 1. 9(화) 연구소 세미나실	부모, 현장	토론: 최미숙 기획조정이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 김인숙 세종시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김순희 본부장(한국노총 여성본부) / 이고은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제3차	2018. 1. 16(화) 연구소 세미나실	정부 부처	토론: 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박정식 사무관(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제4차	2018. 1. 23(화) 연구소 세미나실	시민사회 및 언론	토론: 김종해 교수(참여연대) /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 양선아 기자(한겨레신문)
제5차	2018. 1. 30(화) 연구소 세미나실	원내 임직원	참석: 백선희 소장 및 원내 임직원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3. 22(목) 서울시여성플라자	비혼부모 가족	참석: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관계자
제2차	2018. 4. 12(목) 강원도 삼척시청	농산어촌 가족	참석: 삼척시 보육관계자 및 학부모
제3차	2018. 4 24(화) 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 한부모 가족	참석: 글로벌 한부모회 관계자
제4차	2018. 5. 31(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아 가족	참석: 장애아동 부모
제5차	2018. 7. 19(목) 서울NPO지원센터	환아 가족	참석: 질병을 지닌 아동 부모
제6차	2018. 10. 1(월) 서울NPO지원센터	저소득층 가족	참석: 저소득 가구 부모
제7차	2018. 11. 2(금) 중소기업사업장내	맞벌이 가족	참석: 맞벌이 가구 부모



KAL 열린토론회





KAL 찾아가는 육아현장 간담회

4.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총 10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국제세미나(KICCE East-Asia Seminar)」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3개국(베트남, 피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공무원, UNESCO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국내 최초로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미나(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개최하여 유관기관 교류 및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5. 14(월) 연구소 대회의실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in China and Korea	발표: Zheng, Gongcheng 교수(中国人民大学) Yao, Jianping 교수(华北电力大学) 김병철 교수(통역, 中国人民大学)
제2차	2018. 11. 6(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ssues and Strategies in 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발표: 김병철 교수(中国人民大学) 이연화 교수(東京経済大学) 도남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은기수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최은영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김영근 교수(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신은영 교수(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11. 9(금)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The 1st KICCE Seminar on ECCE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공동주최: 박경미 의원실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Maki Hayashikawa(UNESCO Bangkok) Evelyn Santiago, Cliff Meyers(ARNEC) Rohitesh Chand(Ministry of Education, Fiji) Vitaliy Kim(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Uzbekistan) Nguyen Thi My Trinh(Vietnam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토론: 김경철 교수(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장) 박환보 교수(충남대 교육학과)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KICCE Policy Seminar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4. 23(월) 연구소 대회의실	On the Occasion of Visit of Delegation from Uzbekistan	발표: 박원순 부연구위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참석: 우즈베키스탄장관내각 Ziyaev Zokhidjan 외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19인, KDI 우즈베키스탄 행정아카데미 관계자
제2차	2018. 8. 21(화) 연구소 대회의실	Multicultural and Bilingu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Hong Kong and Korea	발표: 박원순 부연구위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권미경 부연구위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 Eva Cheng, Winnie Ying, Elsie Tsang(이상 The Hong Kong Jockey Club) 참석: Hong Kong Jockey Club Charities Trust 대표단 18인
제3차	2018. 11. 21(수) 연구소 대회의실	On the Occasion of Visit of Delegation from Taipei	발표: 박원순 부연구위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참석: 타이페이 시청 Li-Chen Yang 외 26인

기타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연구소 주최	2018. 9. 12(수)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육아정책 국제심포지엄: Toward a Childbirth and Childcare Friendly Workplace and Society	발표: Mathijn Wilkens, Research Officer(Eurofound) Erica Lindahl 교수(Uppsala University) / Sachiko No-zawa 교수(東京大学) /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 대표(제이앤컨설팅) / 김성식 대표(ESE harmony 컨설팅) / 오승희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018. 10. 24(수) 연구소 대회의실	KICCE-OECD Seminar: Transforming data to policy	발표: Elizabeth Shuey, Arno Engel(이상 OECD)
	2018. 10. 25(목)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제4차 OECD TALIS 3S NPM meeting	참석: Elizabeth Shuey, Arno Engel(이상 OECD) / David Ebbs, Karsten Penon(이상 IEA) / 김은설 연구위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박진아 부연구위원, 이솔미 연구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공동 주최	2018. 11. 10(토) 여의도 63빌딩 별관 세미나실	이른둥이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공동주최: 기아대책, 남인순 의원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발표: Kazutoshi Cho 교수(北海道大学) / 정성훈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 김이경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KICCE Policy Seminar

5.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3일(금) “한국아동패널, 초등학생이 되었어요”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강연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의 김성식 교수의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유아기 교육경험과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습”으로 한국아동패널 종단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주제강연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이점규 과장이 “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 추진방향”을 주제로 패널 심층조사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알레르기, 식이와 흡연 등의 생활요인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계워크숍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분석”이라는 주제로 아동패널 종단데이터 분석법을 소개하였다. 4개의 분과별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초등학교 적응과 사교육, 아동발달, 아동건강, 부모양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문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18. 11. 23(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	주제강연 1: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유아기 교육경험과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습 주제강연 2: 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방향 통계워크숍: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상중심적 분석 분과별 주제발표: 초등학교 적응과 사교육, 아동발달, 아동건강, 부모양육






아동패널

6.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및 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여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를 구성하고,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TF는 다양한 분야(사회정책, 모자보건, 경제, 여성·가족, 유아교육·보육, 공간·문화, 법학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어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를 통해 포럼의 운영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7. 10(화) 연구소 대회의실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발표: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김미곤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2018. 8. 29(수) 연구소 대회의실	4개 분야 (아동복지·권리, 가족, 경제, 유아교육·보육)	발표: 최 영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옥승 명예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제3차	2018. 10. 2(화) 연구소 대회의실	2개 분야 (모자보건, 공간·지역)	발표: 손인숙 교수(건국대병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제4차	2018. 10. 26(금) 연구소 대회의실	2개 분야 (사회정책, 가족)	발표: 이정원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토론회	2018. 11. 28(수)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발표: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나영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태헌 원장(아태인구연구원) 양성은 교수(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이상구 대표(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허 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포용적 포럼

7.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국회, 정부부처, 시민사회 및 학계와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지역사회 양육 및 보건의료기관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재가 양육미혼모와 지역사회 결합방안 토론회」,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등을 통해 국회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1~2차 토론회」 등 부처의 지속적인 정책지원 협력을 수행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SDG 4.2 워킹그룹 등과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인 굿네이버스 등과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여 연구 성과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8. 6. 15(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2018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재구조화: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10년의 성과와 과제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발표: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10년의 성과와 과제(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박영란 서울지회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박찬옥 명예교수(중앙대 유아교육학과) 장하나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정혜손 과장(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홍경란 부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황지현 서울지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2018. 10. 12(금) 서울시여성플라자	2018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한국사회의 육아 현주소 진단: 육아권 및 육아환경 탐색'	주최: 한국사회정책학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6개 학회 및 10개 연구단체	발표1: 육아권의 필요성과 정립 방안(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토론1: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아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발표2: 육아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전달체계 협력 방안(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2: 김성천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일선 교수(경인교대 유아교육과)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8. 10. 17(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지역사회 양육 및 보건의료 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남인순 의원실	주제발표1: 건강한 출발을 위한 영유아 부모의 요구: 생애주기별 양육과 건강지원의 연계(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제발표2: 일본사례를 통해 본 육아와 보건의료 통합지원 방안(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주제발표3: 기관이용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건인력 확충 방안(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토론: 김지애 어머니(정치하는 엄마들) 박현임 과장(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김승옥 센터장(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윤재희 보건교사(월촌초등학교) 손문금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2018. 10. 30(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1층 강당	제1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4.2: 양질의 영유아교육·보육 포럼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이행 전략(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발표: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및 과제(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전효정 교수(동아대, 한국아동학회) 유혜선 본부장(굿네이버스) 엄미선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김현주 팀장(서울특별시청) 정해손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1. 13(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주최: 이학영 의원실 육아정책연구소 굿네이버스	사례발표1: 교사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이○○ 전 어린이집 교사) 사례발표2: 학부모가 경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야기(이진화 서울대학교 부모학생 조합 맘인스누 대표) 주제발표1: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과 과제(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주제발표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김명미 원장(부평 맑은내어린이집) 이미숙 보육담당관(서울특별시청) 장희선 연구원(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김형모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7.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8. 11. 21(수) 연구소 세미나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국가교육회의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발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윤은주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김인숙 원장(죽림어린이집) 박혜진 교사(새싹유치원) 장현주 학부모(부모) 강민지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창규 팀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2018. 11. 22(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재가(在家) 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 결합 방안 토론회	주최: 정춘숙 의원실 김현아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발제1: 한일 재가양육미혼모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합 (Morita Akemi 일본 동경대 교수) 발제2: 재가양육미혼모 지원 방안(김지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박영혜 센터장(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서지형 상임이사(러브더월드) 변규란 원장(에벤에셀모자원) 재가양육미혼모 당사자 사례발표 남소연 서기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8. 12. 14(금) 서울교대 사향문화관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안)	주최: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안)(임부연 부산대 교수) 토론: 남기원 교수(중앙대 유아교육과)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보육과) 유청옥 원장(새싹유치원) 장현주 학부모(석촌유치원) 정혜손 과장(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정책과) 정정옥 센터장(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12. 21(금)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강당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안)	주최: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안)(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이희경 교수(부천대 유아교육과) 남미경 교수(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한지애 학부모(문화어린이집) 김인숙 원장(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 박미선 교사(전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박초아 센터장(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관기관

8. 긴급간담회 및 브라운백 정책 미팅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정책 현안 대응 및 부처 지원 활동을 위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및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주제로 2차례의 긴급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연구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場)인 '브라운백 정책 미팅'을 신설하여 사회적 이슈의 공유 및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긴급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6. 15(금) 연구소 중회의실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방안 논의	참석: 방승희 부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진숙 부위원장(보육노조) 이정미 연구위원(경기도청) 이남정 센터장(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2차	2018. 10. 24(수) 연구소 중회의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 논의	발표: 김동훈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참석: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양선아 기자(한겨레) 오경숙 원장(국공립 면일어린이집)

브라운백 정책 미팅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8. 3. 14(수) 연구소 세미나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및 사회복지정책분야 국정과제 –육아 관련 정책 중심–	발표: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제2차	2018. 5. 4(금) 연구소 대회의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 동향	발표: 양미선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제3차	2018. 9. 11(화) 연구소 세미나실	연구소 발전 및 연구보고서 질 제고 관련 논의	발표: 백선희 소장,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긴급 간담회




브라운백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 MOU를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단일 연도 중 국내 기관과 7건, 국외 기관과 2건 등 총 9건의 양해각서 체결의 성과를 올렸으며, 연구 협력, 세미나 공동개최, 상호지원 관련 협의 등 실제적인 협력과 내실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다. 국외의 경우,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아태지역 연구 참여국가와의 교류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연구소(Center for Social Security Research of China), UNESCO 아태지역 본부(Bangkok)와의 MOU 갱신·연장 체결을 진행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육아정책 교류에 있어 연구소가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SBS 희망내일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시민사회, 언론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외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18. 2. 10(토)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분석 및 실행에 대한 협동연구 수행
2018. 11. 28(수)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연구센터	동아시아 지역의 육아정책 및 영유아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교류

국내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18. 5. 11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SDG4 교육2030 관련 업무 협약] SDG4.2 영유아 부문 워킹그룹 운영
2018. 7. 11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아동권리 교육 상호 교류 등
2018. 9. 3	한국모자보건학회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 관련 공동 연구 수행, 모자 건강 및 보건 관련 연구 자문
2018. 9.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유아의 창의성 증진,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2018. 9. 19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출산 및 육아 관련 사업 협업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018. 9. 2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업무협약]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2018. 10. 22	SBS 희망내일위원회	[육아문화개선 및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 기관의 상호발전 협약] '희망TV SBS' 등 SBS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

1. Issue Paper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	2018. 7. 9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상시 질 관리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2	2018. 7. 9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3	2018. 7. 9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4	2018. 7. 9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부연구위원
5	2018. 7. 13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6	2018. 7. 13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7	2018. 7. 13	보육교직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전문교육과정 운영	강은진 연구위원
8	2018. 8.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9	2018. 8. 14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10	2018. 8. 14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김지현 부연구위원
11	2018. 10. 15	저출산 분야의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12	2018. 10. 25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13	2018. 11. 15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14	2018. 12. 10	초등 저학년 신체건강 증진방안	박원순 부연구위원
15	2018. 12. 19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이윤진 연구위원
16	2018. 12. 28	맞춤형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양미선 부연구위원

2.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1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2권 1호	2018. 6. 30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 비교연구	신민지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이화도 (대구가톨릭대 유아교육과 교수)
		누리과정 5개 영역에 기초한 유아 창의성교육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인화 (인천대 연구원)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 정책에 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대한 잠재성장모형과 모의 특징 및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전혜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수료)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춘경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유아의 문제행동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분류와 영향요인 검증	하여진 (서울대 박사)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유형: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중심으로	안수빈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은선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자료포락분석 및 토빗회귀분석을 활용한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의 상대적 운영효율성 분석	이제무 (한양대 디테크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조경서 (을지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야기할머니 활동이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이은형 (한국복지대 장애유아보육과 조교수) 이수민 (숭의여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김남연 (장안대 유아교육과 부교수) 김정숙 (부천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2. 육아정책연구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2권 2호	2018. 9. 30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 실태 및 만족도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 예비연구	김경은 (명지대 아동학과 박사수료) 한유진 (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권소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한지현 (전북대 아동학과 시간강사)
12권 3호	2018. 12. 31	유치원 교사의 업무수행 경향성과 업무시간 운영의 실제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	안혜정 (연성대 유아교육과 교육전담교수) 이승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경로 및 예측요인	서미정 (제주대 생활환경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부교수)
		만 4세 유아의 야간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유연지 (명지대 아동학과 석사과정) 김진욱 (명지대 아동학과 교수)

3.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IJCCEP)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인 Springer사의 Open Access 플랫폼인 'SpringerOpen'을 통해 전자저널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2(1)	2018. 1. 10	The effects of public pre-kindergarten attendance on first grade literacy achievement: a district study	Michael Haslip (Drexel University)
12(2)	2018. 1. 16	The role of length of maternity leave in supporting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attachment security among American mothers and their infants	Raquel Plotka (School of Education, Pace University) Nancy A. Busch-Rossnagel (Department of Psychology, Fordham University)
12(3)	2018. 2. 13	The key to successful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res in Jordan	Loiy Bani Ismail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American University of Madaba) Hala Hindawi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American University of Madaba) Worud Awamleh (Psychology and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Princess Alia University College, Al-Balqa Applied University) Mohammad Alawamleh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American University of Madaba)
12(4)	2018. 2. 13	Voices of child care provider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policy changes	Corey Shdaimah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Elizabeth Palley and (Adelph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Amanda Miller (The Institute for Innovation & Implemen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

3.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2(5)	2018. 2. 27	Perceived accessibility of child-care in Europe: a cross-country multilevel study	Özgün Ünver (Rese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HIVA-KU Leuven), University of Leuven) Tuba Bircan (Rese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HIVA-KU Leuven), University of Leuven) Ides Nicaise (Rese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HIVA-KU Leuven), University of Leuven)
12(6)	2018. 3. 9	Spotligh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newspaper coverage analysis of universal preschool debate in Argentina	Carolina Snaider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2(7)	2018. 3. 27	Inclusive education for Internally Displaced Children in Kenya: children perceptions of their learning and development needs in post-conflict schooling	Jenestar Wanjiru (Moray Hous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2(8)	2018. 5. 2	Integrating field-trip activities with other activities in the preschool curriculum: its effects on the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skills	Emine Kızıltaş (Vocational School of Health Services, Child Development Program, Ağrı İbrahim Çeçen University) Ramazan Sak (Faculty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Van Yüzüncü Yıl University)
12(9)	2018. 7. 1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factors and interaction quality in Norwegian ECEC for toddlers	Ingrid Midteide Løkken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Faculty of Humanities, Sports and Education Science, 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Elisabeth Bjørnestad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ulty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ies,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Martine L. Broekhuizen (Faculty of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Child, Family, and Education Studies, Utrecht University) Thomas Moser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Faculty of Humanities, Sports and Education Science, 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12(10)	2018. 8. 27	Chinese preschoolers' risk-taking behaviors: a tripartite relation	Jun Hao (Educational Psychology and Research, The University of Memphis) Yeh Hsueh (Educational Psychology and Research, The University of Memphis)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2(11)	2018. 9. 14	State early intervention administrator perspectives of prenatal supports for families with high probability diagnoses	Bonnie Keil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Hunter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JaneDiane Smith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2(12)	2018. 9. 17	Effects of contrasting approaches to the response-contingent learning of young children with significant developmental delays on parents' social-affective behavior	Carl J. Dunst (Orelena Hawks Puckett Institute) Melinda Raab (Orelena Hawks Puckett Institute) Deborah W. Hamby (Orelena Hawks Puckett Institute)
12(13)	2018. 10. 25	Is free pre-primary education associated with increased primary school completion? A global study	Alison Earle (WORLD Policy Analysi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Natalia Milovantseva (Faculty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Jody Heymann (WORLD Policy Analysi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12(14)	2018. 11. 3	Infant feeding nutrition policies in Austral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 content and qualitative analysis	Julianne McGuire (Faculty of Health, Institute of Health and Biomedical Innovation, School of Exercise & Nutrition Sciences, Centre for Child Health Research (CCHR),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Danielle Gallegos (School of Exercise and Nutrition Science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Susan Irvine (Faculty of Education, School of Early Childhood and Inclusive Educ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12(15)	2018. 11. 24	Building an ex-ante 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the capacity impact, benefit incidence, and cost effectiveness of child care subsidies in Turkey	Meltem A. Aran (Development Analytics) Ana Maria Munoz-Boudet (The World Bank) Nazli Aktakke (Development Analytics)
12(16)	2018. 12. 7	Care dialogues: shifting family engagement from risk to rights in the USA	Tonya D. Bibbs (Erikson Institute)
12(17)	2018. 12. 18	The effects of home and school on children's happin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Masood Badri (Abu Dhabi Department of Education & Knowledgei) Ali Al Nuaimi (Abu Dhabi Department of Education & Knowledgei Yang Guang (Abu Dhabi Department of Education & Knowledgei Yousef Al Sheryani (Abu Dhabi Department of Education & Knowledgei Asma Al Rashedi (Abu Dhabi Department of Education & Knowledgei

4.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는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필자
55호	2018. 3. 30	권두언	아동의 놀 권리 강화 정책, 성인세대의 놀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영유아의 하루일과 진단 및 개선 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환경 조성 방향	조숙인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 – 2022)의 주요 내용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성과공유팀
56호	2018. 6. 30	권두언	소통·공유·협력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의 목적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출산·육아 가치관 재조명을 통한 육아문화 개선 방안	김동훈 부연구위원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박진아 부연구위원 최윤경 연구위원
		정책동향	부모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류양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성과공유팀
57호	2018. 9. 15	권두언	육아취약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부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다문화 한부모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권미경 부연구위원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장애아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이정림 연구위원
			KAL 육아정책연구소의 적극적 경청: 환아가정과의 현장 간담회	강은진 연구위원
		정책동향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동향: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 이행 현황을 중심으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덴마크의 육아정책 동향	양미선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성과공유팀
58호	2018. 12. 15	권두언	육아정책 예산, 막대한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유아교육·보육 재정조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과제	김근진 부연구위원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김나영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박지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도남희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성과공유팀

5.
육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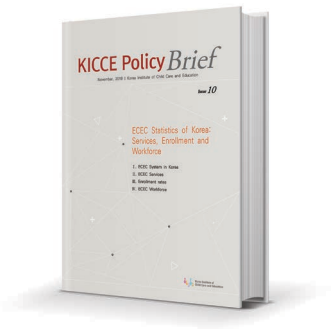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18년에는 '유치원 공공성 및 질 제고 방안 기획시리즈'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현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64호	2018. 2. 10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우선이다	도남희 부연구위원
65호	2018. 2. 10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공 조건은? 부모 체감에 기반해야	이정원 연구위원
66호	2018. 3. 10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은?	이재희 부연구위원 김근진 부연구위원
67호	2018. 6. 5	유아교육·보육 비용 지원 정책, 동상이몽.. 해법은?	최효미 부연구위원
68호	2018. 7. 2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再開)와 만개(滿開)를 기대하며	이윤진 연구위원
69호	2018. 8. 1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도남희 부연구위원
70호	2018. 11. 13	아동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전 방안	김나영 부연구위원
71호	2018. 11. 19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기본을 넘어 창의적 환경으로	강은진 연구위원
72호	2018. 12.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현황 및 대책	최은영 연구위원
73호	2018. 12. 28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김동훈 부연구위원

6.
KICCE Polic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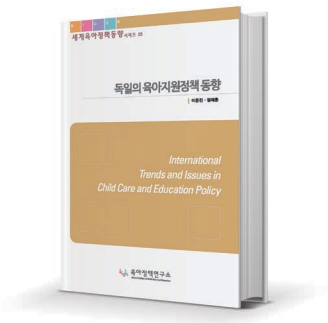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0호	2018. 11. 30	ECEC Statistics of Korea: Services, Enrollment and Workforce	박진아 부연구위원
11호	2018. 12. 15	The Two Korean National Plans on Child Birth and Childcare	이정림 연구위원
12호	2018. 12. 31	Dual Labor Markets and Low Fertility in Korea	이재희 부연구위원

7.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23호	2018. 12. 31	독일의 육아지원 정책	이윤진 부연구위원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V

2019년도 추진계획

· 201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중점연구사업
· 2019년도 사업개요

2019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목표

- 육아정책 연구영역 확대 및 정책 개발 선도
-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 열린 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연구사업 관련 주요 국정과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연구사업 운영방향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 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관련 연구
- 영유아 행복과 발달 증진을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 보육·교육의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연구
- 영유아 가구의 소비 및 육아물가 연구
- 육아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
- 미래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
-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유럽 관련 국제비교 연구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기관 고유 목적 및 미션과의 부합성

·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 현안과의 연계성: 시의적절성, 정책 중요도, 정책 활용성

· 기관장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인구·사회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 정책 연구	· 저출산 극복과 아이기르기 좋은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2040년 우리 사회의 인구와 사회의 변화를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육아지원정책과 자녀양육, 교육 제도를 포함하는 양육환경에 대한 진단 - 2040 인구·사회의 변화 예측 - 육아정책 관련 2040 수요 예측 - 2040 육아지원정책 방향성 및 정책과제 도출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 보편복지,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실태 파악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성과분석 모형 설정 및 분석 -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방안 마련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 가족 배경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의 격차, 이를 통한 아동의 발달과 성장, 성인기의 성취까지 이어지는 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무상보육·교육 실현 후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가족의 배경적 요인이 아동 양육환경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 자료 구축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 빈곤가정과 일반(비빈곤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비교 분석 - 빈곤가정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국내외 통합적 지원 사례 분석 -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에 있어 성장·발달에서의 격차 해소 지원방안 모색

2019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의 격차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여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로드맵을 제시함.
2	인구·사회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 정책 연구
	우리 사회의 인구·사회변화 예측을 통해 2040년 양육환경을 구체화하고,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40년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중장기 육아정책 설계에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영아를 둔 가구의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영아 대상 양육지원의 방향성 및 주요 전략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영아 기관보육의 적용 대상 및 적정 규모를 명료화하여 영아대상 보육료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돌봄수요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을 위한 기존 정책이 갖고 있는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5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 분석 및 확충방안
	보육·유아교육 분야의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고,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보육·유아교육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질 개선 및 양적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이주배경 가족의 자녀양육 실태를 조사하여 양육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 육아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헌법상 기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하여 이주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및 이주배경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7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Ⅱ)
	동아시아 국가별(한국, 중국, 일본) 비교 연구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및 육아정책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국의 정책 도입 및 실행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임신·출산·육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8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우리나라가 달성이 낮게 나타난 부분과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이행복사회' 지표를 개발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 인증사업 도입 방안 연구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기관 내 아동학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없는 유아교육·보육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0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특별한 요구를 지닌 장애 영유아의 다양한 돌봄 수요와 양육 실태 및 가족의 요구를 배경에 따라 분석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11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보편복지,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2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한국인의 출산·육아와 행복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 아동행복지표를 참고하여 육아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출산·육아 가구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13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2019-Starting Strong Survey 분석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OECD 교육기술국 주관 「TALIS 국제 유아교원 조사」1주기 사업(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8)의 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OECD 본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한 9개국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4	수시연구사업
	정부정책 수립, 국내외 동향분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2019년도 사업개요

(2)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3)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3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4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또한 시설 관리자, 시설 종사자 및 영유아·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족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를 1, 2차년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2차년도에 이어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1차년도(2018년)에 개발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2019년도에 육아 관련 사회적 이슈 및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부처에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Ⅱ)
	본 연구는 총 3개의 세부연구 과제로 구성되며,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전년도 구축된 영유아 가구 중 취학연령으로 전환되는 가구를 지속 추적조사하여 육아부담 및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는 영유아 자녀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행태 및 양육비,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비용, 정책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육아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등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Ⅱ)'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육아서비스 지원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연차별 연구수행을 통해 육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 예측 및 장기 수급 전망 등을 통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하고자 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Ⅱ)'를 통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영유아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고유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의 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5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Ⅱ):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기존 부모교육의 내용이 포괄하지 못하던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하고자 함. 기존 부모교육의 제공 형태가 포괄하지 못하던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를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019년도 사업개요

번호	과제명 개요
6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Ⅱ):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KICCE 유아관찰척도 개발 및 시범적용
	기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전산화 구축사업을 통하여 아를 현장에 확대·보급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유아 관찰을 통한 자기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누리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차년도(2019년)에는 1차년도(2018년)에 구축된 전산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전산에 구축될 자료를 통하여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7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가족 배경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격차와 빈곤가정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빈곤 가정 영유아의 양육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영유아 대비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성장발달에서의 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8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친화마을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분권을 실현하고 육아의 지역사회 격차를 해소하여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고자 함. 1차년도에는 육아친화마을 인증지표를 포함한 인증내용 및 인증방법들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안을 마련함. 1차년도 기초 연구 이후는 시범 사업 실시, 인증사업 진행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실용화와 안착에 기여하고자 함.
9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Ⅱ): 컨설팅 실행 및 과정 분석
	아태지역 국가의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고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여, 아태지역 지원우선 국가(선정국)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을 실행하고 그 과정의 이슈와 추진 전략,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여 SDG 4.2 이행을 위한 선정국 지원 및 아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10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Ⅳ): CARE 컨설팅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한 컨설팅 지원 연구 중 4차년도 연구로, 3차년도까지 개발된 CARE컨설팅 모형을 어린이집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등급별, 지표영역별로 적용이 가능한 CARE컨설팅 지원모형과 운영 계획을 도출하고자 함.
1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 방안 연구(Ⅰ):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연구로 문화의 구성요소(기술, 상징, 언어, 가치, 규범(정책) 등)를 고려하면서 분석할 예정이며 본 1차년도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가진 부정적 인식의 핵심을 분석하여 그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육아문화 조성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의 인식과 부-모 공평공동 책임의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등 홍보 기제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육아인식이 정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1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Ⅱ)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본 12차년도 연구는 가구특성을 축소하고 아동 특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여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14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15	육아정책연구 공유 플랫폼(platform) 구축사업(Ⅰ)
	최신 트렌드의 연구성과 방법을 적용해서 리뉴얼한 홈페이지에 탑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정책수요자와 연구소 간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2018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Annual Report

발행일 2019년 4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